

공통

자율준수편람

2025

한국콜마(주)

제·개정 이력관리

Ver.	내용	일자	담당부서
1	제정	2021. 11. 30.	CP팀
2	1차 개정	2022. 06. 30.	준법지원팀
3	2차 개정	2022. 12. 28.	준법지원팀
4	3차 개정	2023. 06. 30.	준법지원팀
5	4차 개정	2023. 12. 29.	준법지원팀
6	5차 개정	2024. 06. 28.	준법지원팀
7	6차 개정	2024. 12. 31.	준법지원팀
8	7차 개정	2025. 01. 01.	준법지원팀
9	8차 개정	2025. 01. 13.	준법지원팀
10	9차 개정	2025. 06. 30.	준법지원팀
11	10차 개정	2025. 12. 31	준법지원팀

목차

I . 들어가며	
1. CP에 대한 이해	10
2. 우리회사 CP	11
3. 공정거래위원회	15
II . 공정거래법규	
1. 공정거래법	17
2. 하도급법	57
III. 사업관련 필수법규	
1. 화장품법	95
IV. 부록	
1. 규정 및 방침	122
2. 자율점검표	156

차례

제·개정 이력관리		
목차 및 차례		
최고경영자 인사말		
자율준수관리자 인사말		
I. 들어가며		
1.	CP에 대한 이해	10
1.1	의의와 목적	10
1.2	도입요건	10
2.	우리회사 CP	11
2.1	조직구성	11
2.2	역할과 책임	11
2.3	관리규정	12
2.4	운영성과	13
3.	공정거래위원회	15
3.1	목적과 기능	15
3.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16

II.	공정거래법규	
1.	공정거래법	17
1.1	제정 목적	17
1.2	경제력집중 억제	17
1.2.1	키워드	18
1.2.2	우리회사 관련제도	18
1.2.3	Q&A	27
1.3	불공정거래행위	32
1.3.1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32
1.3.2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	41
1.3.3	위반시 제재	42
1.3.4	Do&Don'ts	43
1.3.5	Q&A	44
1.3.6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체크리스트	48
1.4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	49
1.4.1	개요	49
1.4.2	기업결합 수단	49
1.4.3	신고제도	50
1.4.4	심사	51

차례

1.4.5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조치	52
1.4.6	Q&A	53
1.4.7	Do&Don'ts	56
2.	하도급법	57
2.1	제정 목적	57
2.2	주요 내용	57
2.2.1	키워드	57
2.2.2	원사업자 의무사항	58
2.2.3	원사업자 금지사항	63
2.3	하도급대금연동제	75
2.3.1	개요	75
2.3.2	키워드	75
2.3.3	주요내용	76
2.3.4	Q&A	80
2.3.5	하도급법 관련 체크리스트	90
III. 사업관련 필수법규		
1.	화장품법	95
1.1	정의	95
1.2	개요	95
1.2.1	용어설명	95
1.2.2	제조업의 등록	96

차례

1.2.3	제조업자 준수사항	97
1.2.4	화장품 표시와 광고	100
1.2.5	화장품 표시기준 및 방법	101
1.2.6	화장품 표시·광고 범위 및 준수사항	104
1.2.7	화장품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105
1.2.8	화장품의 유통·판매	107
1.2.9	화장품 분쟁해결절차	111
1.2.10	관련판례	115
1.2.11	Q&A	118
1.2.12	Do&Don'ts	120
1.2.13	화장품법 관련 업무 체크리스트	121

IV. 부록

1.	규정 및 방침	
①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122
②	내부거래 관리규정	135
③	준법통제기준	144
④	부패방지정책	152
⑤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	155
2.	자율점검표	
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자율점검표	156
⑦	하도급거래 자율점검표	158
⑧	영업비밀 보호 자율점검표	160
⑨	자율준수 공통 자율점검표	162

최고경영자 인사말

국내 화장품 업계의 준법·윤리경영을 리딩하는 모범 기업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콜마 대표이사 최현규입니다.

1990년부터 성장을 거듭해 온 한국콜마는 국내 화장품 업계에 처음으로 ODM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했고, 세계 최초로 화장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 융합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등 혁신을 거듭하며 국내 화장품 업계의 기술력과 품질을 리딩해 왔습니다.

매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온 우리에게 앞으로 걸어나갈 길은 다른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한국콜마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더 근본적인 혁신으로 성장의 기틀을 다지고자 합니다.

당사는 CP(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시작으로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행했고, 강화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자발적 의지를 표명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UN글로벌컴팩트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에 대한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콜마는 준법·윤리경영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컴플라이언스를 조직문화로 내재화함으로써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한국콜마는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 수준을 바탕으로 트렌드 파악, 상품기획, 개발, 출하, 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No.1 Platform Service Provider입니다.

우리는 이에 더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준법·윤리경영을 리딩하는 모범 기업이 되어 Best Practice를 전파하며 임직원과 함께 고객, 파트너, 주주 그리고 사회로부터 꾸준히 신뢰를 얻어 나갈 것입니다.

한국콜마가 준법·윤리경영의 모범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CP에 대한 임직원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정도(正道)를 지키며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정신으로 우직하게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한국콜마(주) 대표이사
최현규



자율준수관리자 인사말

윤리경영의 튼튼한 기초, 컴플라이언스 문화

안녕하십니까, 한국콜마 자율준수관리자 이승철입니다.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이 증가한 시대에 기업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국콜마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적 감시 및 예방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라는 내부준법시스템을 마련하여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CP등급평가를 도입하고, ISO 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ISO 37301(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의 통합인증을 취득 및 유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내 화장품 업계의 윤리경영 모범기업으로서 공정한 기업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의 핵심은 임직원을 비롯한 한국콜마의 모든 이해관계자께서 적극적인 준법의지를 가지고 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동참해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한국콜마 임직원은 규범준수 방침을 기본으로 파트너사 및 고객사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윤리경영 활동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기업경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자율준수 관리자로서 임직원, 고객사, 파트너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콜마(주) 지속가능경영그룹장(자율준수관리자)

이승철 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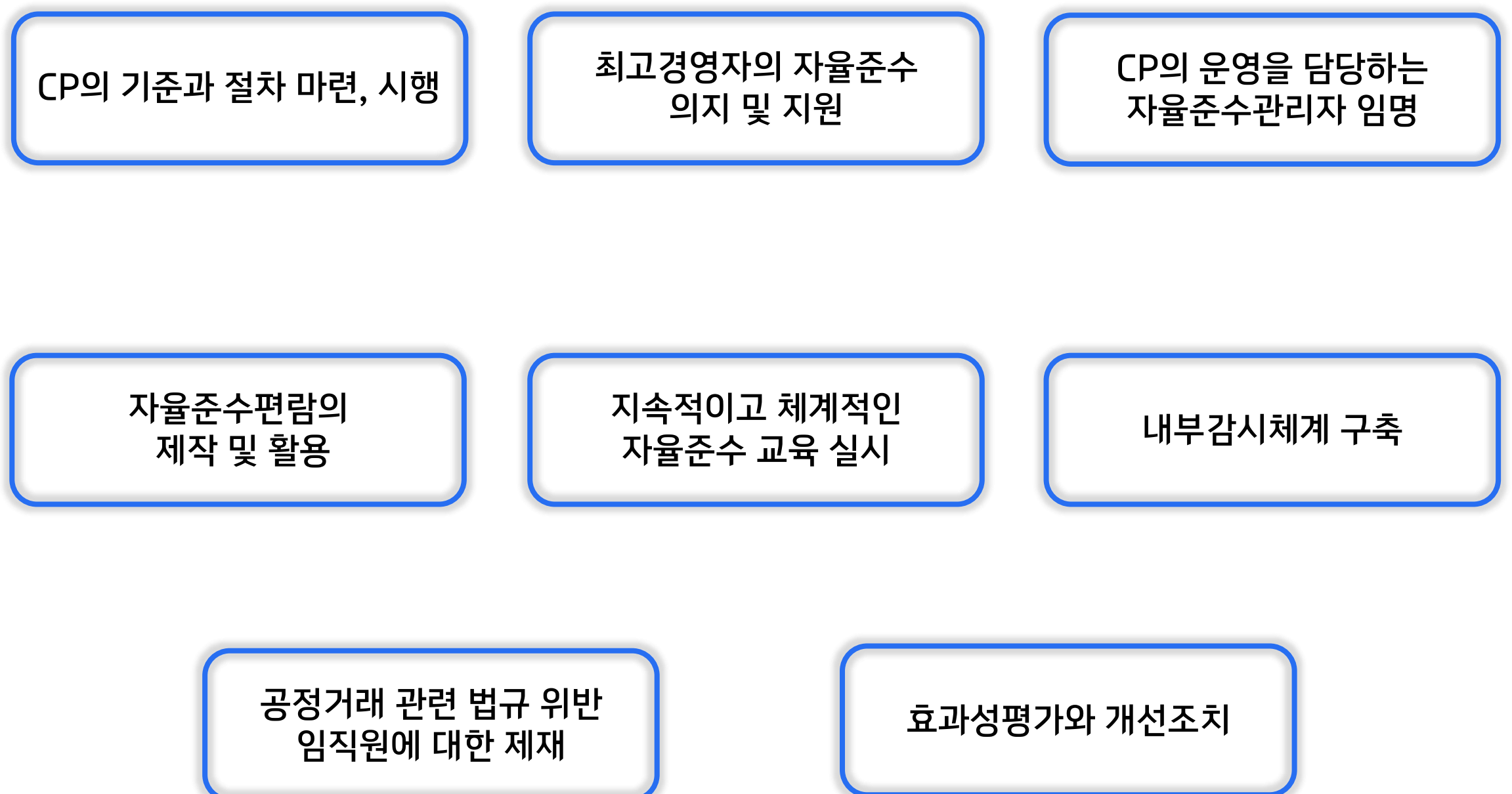
I. 들어가며

1 CP에 대한 이해

1.1 의의와 목적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스스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 준법시스템
- 목적: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에 관한 행동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 예방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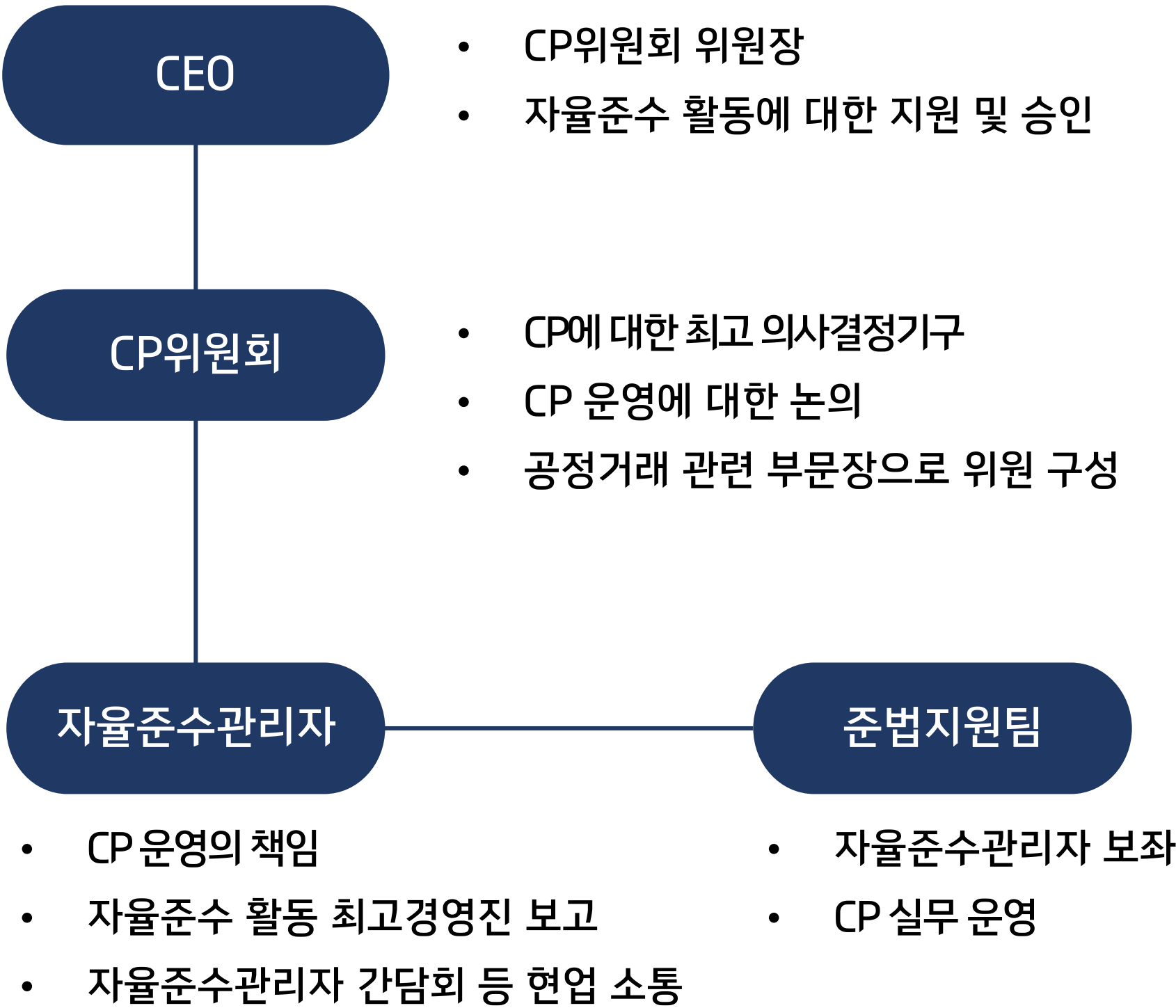
1.2 도입 요건



I. 들어가며

2 우리회사 CP

2.1 조직구성



2.2 역할과 책임



자율준수관리자

- 한국콜마의 CP 운영에 책임과 권한을 가진 총괄 관리자
- 이사회 승인을 통해 선임
- 자율준수편람 개정, 임직원 준법교육 실시 등 CP 활동에 대한 승인 권한
- 법 위반, 교육 미이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
- 자율준수관리자 간담회 등 현업부서의 의견 청취 자리 마련
- 규제기관 협조 및 지원

I. 들어가며



주관부서(준법지원팀)

- 자율준수관리자 보좌
- CP 실무 운영
 - CP운영규정 정비 등 CP 체계 마련
 - 교육 및 임직원 참여활동 개최 등 CP문화 확산
 - CP 운영 효과성 평가 및 보고
 - CP위원회 및 자율준수관리자 간담회 운영
- 준법점검 등 임직원의 법 위반 리스크 사전 관리
- 행정 및 법무지원, 대응

2.3 관리 규정

CP운영규정

한국콜마 CP 운영의 기준과 절차

준법통제기준

회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임직원들이 해당 법규를 잘 따르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일련의 기준

I. 들어가며

2.4 운영성과

2021

- Compliance Program 도입
- CP운영규정 제정
- 자율준수관리자 이사회 선임

2022

- 부패방지 및 컴플라이언스 방침 승인 및 제정
- 전 임직원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서약
- ISO37001, 37301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통합인증
-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제정 및 배포
- 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 시행

2023

- CP위원회 출범
- 제1회 자율준수의 날 개최
- 전 임직원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서약
- 협력사 대상 윤리경영서신 최초발행
- 임직원 대상 Compliance Letter 최초발행

I. 들어가며

2.4 운영성과

2024

- 공정거래위원회 CP등급평가 'A'등급 획득
- 제2회 자율준수의 날 개최
- 전 임직원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서약
- 전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법 교육 의무화

2025

- 공정거래위원회 CP등급평가 'A'등급 획득
- 제3회 자율준수의 날 개최
- 제1회 자율준수우수자 수상식 개최
- 전 임직원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서약
- 자율준수관리자 간담회 개설
- ISO37001, 37301 통합인증 갱신

I. 들어가며

3 공정거래위원회

3.1 목적과 기능

경쟁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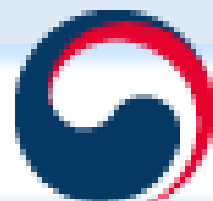


시장 참여기업 간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 및 규제 집행

소비자 주권확립



허위·과장광고, 불공정 약관 등
소비자의 주권 확립을 위한
정책 및 규제 집행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 경쟁 기반 확보



거래상 지위 차이로 인한 경제적
약자의 자생적 발전역량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 집행

경제력집중 억제



소수의 경제주체에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및 규제 집행

I. 들어가며

3.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경쟁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거래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조물책임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본 편람에서는 한국콜마(주) 임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있어 주로 연관되어 있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에 관한 내용을 현행기준으로 다룰 예정

II. 공정거래법규

1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전문 확인하기

1.1 제정 목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방지

경제력집중 방지

부당공동행위 규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창의적인 기업활동 조장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



1.2 경제력집중 억제

상호출자 금지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신규순환출자 금지

공시 의무

채무보증 제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금융보험사, 공익
법인 의결권 제한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II. 공정거래법규

1.2.1 키워드

구분	설명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산 총액이 GDP(국내 총생산)의 0.5% 이상인 기업집단
동일인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공정거래법에서의 의미)
특수관계인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인 '동일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지주회사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고, 자회사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회사



1.2.2 우리회사 관련 제도

-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법 제26~29조)
 - 주요 내용: 기업집단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 거래 현황등을 연 또는 분기별 공시
 - 위반 시 제재
 - 행정적 제재: 법인 1억원 이하, 개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II. 공정거래법규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법 제47조)
 - 정의: 공시대상 계열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국내 계열회사와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 금지
 - '사익편취행위' 또는 '부당 내부거래'로 통칭함
 - 위반 시 제재
 - 행정적 제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관련 금액 10% 이하)
 - 형사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적용 요건

제공 주체	이익제공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제공 객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함)- 동일인이 단독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위의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 금지 유형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구분	내용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 거래•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 거래• 인력 거래 <p>▷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대가보다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거래하는 행위</p>

II. 공정거래법규

예시	<p>[자금거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주체가 제공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p>[자산, 상품, 용역 거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공객체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제공객체를 통해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p>[인력거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 후 인건비는 제공주체가 부담한 경우
적용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과의 차이 7% 미만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 총액 50억 원(상품·용역의 경우 200억 원) 미만일 경우

■ 사업 기회의 제공

구분	내용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로서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주체가 유망한 사업기회를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지원 객체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적용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가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II. 공정거래법규

■ 상당한 규모의 거래

구분	내용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① 시장참여자 조사 ② 비교견적 검토 ③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적합한 선정과정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합리적인 검토없이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체결 하는 방식으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
적용제외 (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거래당사자간 상품·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 총액이 200억원 미만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

관련 심결례



기업집단 J의 동일인 2세 소유 회사를 위한 무상 신용 보강 제공 행위 제재

사실관계

100%에 가까운 내부거래에 의존해 성장한 2세 소유의 J토건 및 6개 계열회사에게 약 3조 2천억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통해 이 사업을 추진하여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 및 급여의 형태로 동일인 2세에게 이익이 귀속됨

공정위 판단

무상 신용보강 제공 행위를 통해 J토건이 대규모 사업 성공을 이룩하며 기업집단 내 핵심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J토건을 중심으로 기업 지배구조가 재편되며 동일인 2세로의 부당한 경영권 승계가 완성되었다고 보고 과징금 180억원 부과 및 고발조치하였음

II. 공정거래법규

관련 심결례



기업집단 C의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 행위 제재

사실관계

기업집단 C의 계열회사 D사가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E사 및 F사에게 자신이 개발·등록한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의약품 보관용역도 무상으로 제공하였음

공정위 판단

상표권 이용 및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지원객체인 E사와 F사는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었고 이것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부당한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귀속시킨 행위로써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3천 5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관련 심결례



기업집단 H의 총수 2세 소유 회사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 행위 제재

사실관계

기업집단 H의 최상단 회사인 I사가 총수 2세 소유의 J사와 K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자신이 수행하고 있던 건설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해지하고 J,K사에게 이관하는 방식으로 사업기회를 제공하였음

공정위 판단

정당한 사유없이 기존 I사가 진행하던 건설공사를 J, K사에게 이관하는 것은 총수 2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적절한 사익편취행위인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II. 공정거래법규

■ 만화로 보는 부당 내부거래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II. 공정거래법규

-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법 제18조)
 - 제한 사항
 -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 비계열사 주식 5% 초과 소유 금지
 - 금융·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
 -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 보유
 - 손자회사 국내회사 소유 금지
 - 위반 시 제재
 - 행정적 제재: 시정명령, 과징금(관련금액 20% 이하)
 - 형사적 제재: 3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



관련 심결례



H사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 제재

사실관계

H사는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M 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의 39.92%를 소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였음.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법 제18조에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있음. H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를 소유하여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배하였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II. 공정거래법규

-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법 제26조)
 - 대규모 내부거래의 범위와 공시기한
 -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거래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이상인 경우
 - 공시기한: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 의결내용 공시
 - 위반 시 제재
 - 행정적 제재: 시정명령, 법인 1억원, 개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 심결례



기업집단 K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 위반 제재

사실관계

기업집단 K는 계열회사간 대규모 내부거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거래, 유가증권거래 사항 등을 미의결, 미공시한 건이 12건으로 확인되었음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K 집단의 7개 계열회사에게 총 과태료 3억 5950만원을 부과하였음

관련 심결례



A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 위반 제재

사실관계

A사는 2023년도 1분기부터 2023년도 4분기까지 계열회사인 B사와 상품용역 거래를 하면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고 공시기한을 경과한 이후 공시하였음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A, B사에게 과태료 3억 2천만원을 부과하였음

II. 공정거래법규

관련 판례

대법원 2016.3.10. 선고 2014두8568 판결



사실관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할인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여 C사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점과 S사가 보유한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비율을 다른 계열회사의 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율보다 높게 적용하여 C사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들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S사 등이 IT계열회사인 C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판단요소가 되는 정상가격이란, 해당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규모, 종류, 기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의미한다고 전제하였다. 공정위가 제시한 사례들은 S사 등이 C사와 체결한 OS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인건비 단가 산정에 있어서 고시단가를 할인하여 산정하는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S사 등이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인건비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C사가 S사에 제공한 유지보수 서비스의 수준이나 범위는 타 계열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제공되었으므로, S사가 C사에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유지보수 비율을 적용하여 유지보수비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이유와 결론을 유지하여 S사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사실관계

일감 몰아주기로 자주 거론되는 것이 계열회사와의 IT 서비스 거래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OS 계약 시 ‘인건비 단가’ 또는 ‘유지보수비율’이 정상가격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이 인정됨을 유의하여 단가를 적용해야 합니다.

II. 공정거래법규

1.2.3 Q&A

Q.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기준이 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 분할합병, 물적 분할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 등기일, 합병 등기일, 분할등기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 신고 사유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Q.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는 항상 금지되나요?

A.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①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②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③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④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제외)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인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제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Q.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부여된 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A. 지주회사 설립 · 전환 당시 부여된 유예기간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①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②주식처분 금지 계약, ③사업의 현저한 손실 ④그 밖의 사유로 부채액 감소 또는 주식의 취득 처분 등이 곤란 경우)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 2년 연장 가능합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개별정상금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하나요?

A. 개별정상금리는 지원 주체와 지원 객체 사이의 자금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 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들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유사한 상황이란 사안별로 지원규모, 지원 시점의 금리 변동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해당일 직전·직후 또는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는 없으나 그 이전에 변동금리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시점에 지원 객체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 변동금리를 유사한 시점에 차입한 금리로 봅니다.

Q. 정상 가격은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하나요?

A. 해당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실제 거래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거래와 동일한 실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① 먼저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를 선정하고, ② 그 사례와 해당 지원행위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조건 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 ③ 그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정상가격을 산정합니다. 해당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사례도 찾을 수 없다면 부득이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함으로써 정상가격을 산정합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甲이 지원 객체와 지원 주체 양자에게 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에 정상 급여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A. 지원 객체와 지원 주체 양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1) 그 양자에 대한 근로 제공 및 대가 지급의 구분 관계가 합리적이고 명확한 때에는 해당 인력이 지원 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 수당 등의 금액에서 해당 인력의 지원 주체에 대한 근로 제공의 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정상 급여로 간주합니다.
 (2) 그 양자에 대한 근로 제공 및 대가 지급의 구분 관계가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인력이 지원 객체와 지원주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급여 수당 등에서 지원 객체와 지원 주체의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중 지원 객체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 금액을 정상 급여로 간주합니다.
 다만, 인력 제공과 관련된 사업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을 지원 객체와 지원 주체의 매출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Q. 부당한 거래 단계 추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나요?

A. 지원 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지원 객체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지원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거래상 지원 객체의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원 객체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지원 행위에 해당합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총수일가 지분보유비율이 낮은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A.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조항(법 제45조 제1항 제9호)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모든 사업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총수일가 사익편취금지 규제 규율 대상이 아닌 회사라도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조항에 따라 금지됩니다.

Q. 사익편취금지 규제는 규율 대상 회사간의 모든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것인가요?

A. 사익편취금지 규제는 내부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내부거래가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귀속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직계열화, 거래비용 절감, 범위의 경제 등 효율성 목적을 위한 내부거래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 제47조는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내부거래로서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② 사업 기회의 제공, ③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금지 행위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경쟁입찰의 절차를 거쳐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나요?

A. 경쟁입찰의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가 당연히 적법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형상으로는 경쟁입찰의 절차를 거쳤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열회사가 낙찰 받게 하기 위한 형식적 과정에 불과한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일감몰아주기 규정에 따르면 계열회사와 수의계약 체결 자체가 금지되는 것인가요?

A. 일감몰아주기 금지규정이 수의계약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사유로 계열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검토없이 계열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신제품 광고 업무를 신제품 출시 시기에 맞춰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어 이미 검증된 계열 광고회사에 신제품 광고제작 업무를 위탁하였다. 효율성 증대 효과에 따른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반드시 내부 계열회사가 아니더라도 업무능력이 검증된 외부 광고회사와 거래함으로써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일감몰아주기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회사의 정보시스템에는 핵심적인 영업 기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시스템 운영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계열 IT업체에 위탁하였다. 보안성에 따른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외부 IT업체에 정보시스템 운영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보안협약서 체결, 계약서상 보안사고 발생시 피해보상규정 마련, 물리적 보안장치 구축 등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정보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일감몰아주기 예외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II. 공정거래법규

1.3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법 제45조)

1.3.1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 거래거절

-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개시 거절, 거래관계 중단, 거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금지

관련 심결례



I사의 핵심부품의 공급을 거절하게 한 행위 제재

사실관계

방향포경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I사는 방향포경의 핵심부품을 국내에서 독점 생산하는 S사에게 자신의 경쟁사업자를 대상으로 핵심부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이 결과 자주포 방향포경 경쟁 입찰 과정에 I사가 단독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공급자로 선정 되었음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I사가 S사로 하여금 거래를 거절하게 한 행위에 대해 방향포경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여 공정거래법 제4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 차별적 취급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지역이나 가격, 기타 거래조건을 차별하여 경쟁사업자나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약화시켜 자신의 지위를 유지, 강화하는 행위 금지



II. 공정거래법규

관련 심결례



G사의 가맹점 비가맹점 간 차별적 취급 행위 제재

사실관계

스크린골프장에 골프시뮬레이터를 판매하는 사업자이자 가맹사업자인 G사는 비가맹점들의 가맹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게만 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차별하여 거래하였음

공정위 판단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에 따른 차별적취급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대방의 지위를 약화시킨 G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부과,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음

■ 경쟁사업자 배제

- 경쟁사업자 배제를 위해 정상적인 경쟁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

관련 심결례



N사의 경쟁사 배제행위 제재

사실관계

온라인 부동산 정보 플랫폼 시장의 1위 사업자인 N사는 자신들과 계약관계인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경쟁사인 C사와의 계약하지 못하도록 제3자 정보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할 것이라고 통보하였음. 이에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C사에게 제휴 불가 의사를 표명하여 C사는 사실상 시장에서 배제되었음

공정위 판단

경쟁사인 C사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N사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N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32백만원을 부과하였음

II. 공정거래법규

- 부당한 고객유인
 - 부당한 이익 제공, 계약 성립의 저지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관련 심결례



J사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제재

사실관계

의약품 제조판매사인 J사가 전국 1,500여개 병의원에 현금 및 물품, 식사 및 향응제공, 골프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약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음

공정위 판단

자신들과 거래하도록 리베이트(현금성 대가), 식사 및 향응 등을 제공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의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J사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299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개인을 고발하였음

- 거래강제
 - 끼워팔기, 사원판매와 같은 거래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관련 심결례



S사의 거래 강제 행위 제재

사실관계

S사는 판매부진으로 재고소진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 직급별 판매 목표를 할당하고 개인 판매 실적을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원들에게 판매를 강요하였음. 일부 제품은 임직원에게 강제로 할당하고 제품 가격만큼 급여에서 공제하기도 하였음.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S전자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거래강제 행위 위반으로 판단하여 S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하였음

II. 공정거래법규

- 거래상 지위 남용
 -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등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관련 심결례



B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불이익 제공) 행위 제재

사실관계

세계 2위 칩 설계 사업자인 B사는 구매자인 S사에게 부품 선적 중단, 구매주문승인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내세워 스마트 기기용 부품 공급 장기 계약 체결을 강제하였음

공정위 판단

B사가 구매자인 S사에게 공급 장기 계약 미체결에 대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점을 악용하여 S사의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B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7억원을 부과하였음

관련 심결례



N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구입강제) 행위 제재

사실관계

유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N사는 자신과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유통기한 임박제품과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을 강제할당, 임의공급 방식으로 구입을 강요하였음

공정위 판단

N사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는 N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123억원 부과 및 검찰에 고발하였음

II. 공정거래법규

■ 만화로 보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II. 공정거래법규

- 구속조건부 거래
 - 거래지역 및 상대방 제한, 배타조건부 거래 등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금지

관련 심결례



B사 및 R사의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 제재

사실관계

이륜차량 공급 사업자인 B사는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량을 공급하면서 계열회사 관계인 R사의 경쟁사와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렌탈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으로 설정하였음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B사와 R사의 행위가 R사가 영위하는 배달대행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므로 공정거래법 제45조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음

- 사업활동 방해
 - 거래지역 및 상대방 제한, 배타조건부 거래 등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금지

관련 심결례



K사의 지입차주 사업활동 방해 행위 제재

사실관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K사는 지입 계약 해지를 요구한 지입차주들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지입차주의 식품운반업 등록이 삭제되도록 행정청에 변경신고함으로써 지입 차주들의 식품 운반 사업 영위가 어렵도록 하였음

공정위 판단

지입차주의 해지요구에 보복하기 위하여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지입차주들의 본 사업활동까지 방해한 K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였음

II. 공정거래법규

■ 만화로 보는 구속 조건부 거래행위



출처: 소상공인진흥공단

II. 공정거래법규

■ 부당지원행위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게 자금, 자산, 인력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지원 수단별 예시

부당한 자금 지원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의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리보다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지원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을 게을리 하는 경우

부당한 자산, 상품 등 지원

- 지원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가 매입한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경우
- 부동산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지원객체에게 매도하거나, 고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 외상매출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부당한 거래단계 추가

- 지원주체가 납품처로 하여금 제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지원객체를 거쳐 구매하게 하는 경우

부당한 인력 지원

- 지원주체가 자신의 소속 인력을 지원객체에 전적, 파견시키고 급여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II. 공정거래법규

관련 심결례



기업집단 C의 부실계열사 자금 지원행위 제재

사실관계

기업집단 C소속의 D사와 E사가 각각 TRS계약을 신용보강 및 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하여 계열회사인 F사 및 G사가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공정위 판단

D사와 E사의 자금지원행위로 인하여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부실계열사 F와 G사가 저금리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되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지원행위를 통해 두 계열사가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하게 되어 각각의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 및 지원주체와 객체에게 과징금 65억 4,100만원을 잠정 부과하였음

관련 심결례



기업집단 A의 소속 계열회사 간 부당한 지원행위 제재

사실관계

기업집단 A의 100% 자회사인 C사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신공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대규모 자금 차입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음. 이에 지주회사 G사는 자신의 예금 750억을 담보로 무상 제공하여 C사가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저리로 차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공정위 판단

G사가 C사에게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C사의 경쟁여건이 개선되었고 이는 화장품 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및 각 사에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II. 공정거래법규

1.3.2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

구분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
관련규정	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법 제47조
규제내용	다른 회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행위 금지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지원주체	제한 없음 (모든 사업자)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원객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계열회사 요건 불필요)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으로 한정), 동일인이 단독 또는 다른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그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금지행위 유형	①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제공 행위 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②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회사를 매개로 거래	①정상 거래 조건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②사업기회 제공 ③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④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예외
부당성 판단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입증 필요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당 지원 행위와 달리 공정거래 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

II. 공정거래법규

1.3.3 위반시 제재

■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행위중지, 시정명령사실 공표 등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4%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10% 이하,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엄중처벌

■ 형사적 제재

- 부당한 지원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부당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사업활동 방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안전지대(Safety Zone)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거나 연간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위법성 심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
→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등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유형에만 적용 가능

II. 공정거래법규

1.3.4 Do & Don'ts



항목	check
계열사, 관계사와의 거래를 비계열사, 비관계사와의 거래와 별도로 구별하여 협상부터 거래개시, 종료 과정까지 법 위반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한다.	
새로운 거래상대방을 결정할 때,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수의계약에 의해 진행할 경우, 다수 후보 사업자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가격 등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비교·평가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구비한다.	
당사의 내부거래 관리규정을 근거로 계열사 및 관계사 거래 업무를 수행한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는 모두 문서화하여 별도 보관한다.	
거래 대가가 예산 범위 내에 속하더라도 반드시 거래 대가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	
거래 조건을 검토할 때는 시중의 통상적인 수준을 확인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계열사 및 관계사와 계약할 때에도 다른 거래상대방과 동일하게 계약 불이행시의 페널티 조항을 포함한다.	
계열사 및 관계사에게도 이행기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독촉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책임을 묻는다.	
계약 종료 후 자동 기간 연장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도, 최초 계약 체결과 마찬가지로 거래조건의 객관성, 적정성을 검토하여 갱신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근거를 문서화한다.	

II. 공정거래법규

1.3.5 Q&A

Q. A회사는 A회사의 자회사인 B회사, A회사의 자회사가 아닌 저회 C회사와 각각 주택 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는 자회사인 B회사에게는 지체상금 부과 조항을 설정하지 아니한 반면 저회 C회사에게는 지체상금 부과 조항을 설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A. 지체상금과 같은 계약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독립된 거래 주체인 자회사와 비자회사 간에 차별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자회사에게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경영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A회사의 행위는 자기의 자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취급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A회사는 경쟁사의 위치에 있는 B사를 배제하기 위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A.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경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상품 또는 용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통상 거래되는 가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A회사가 부당 염매를 한다고 하여 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만일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와 함께 이루어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집단적 차별 취급과 부당한 공동 행위는 동일한 사항을 규제하는 이중적 규제 아닌가요?

A. 집단적 차별은 여러 사업자가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차별 취급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당한 공동 행위와 달리 집단적 차별 취급은 합의가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차별 취급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현실적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차별 행위가 행해져야 합니다.

Q. 부당한 ‘고객’유인이라는 것은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A. 이익 제공의 상대방에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도 포함됩니다.

Q. 소비자에 대한 거래 거절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나요?

A. 거래 거절의 상대방은 특정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거래상대방, 즉 소비자에 대한 거래 거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 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위탁매매인에게 판매 대상을 지정하는 위탁매매관계도 거래상대방 제한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나요?

A. 사업자가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 위탁매매인에게 판매대상 등을 지정하는 상법상 위탁매매관계는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당사자 간 자발적 합의에 의해 거래상대방이나 거래 지역을 제한한 경우에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나요?

A.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나 거래 지역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의 요구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우의 조건은 그 형태나 명칭을 묻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구속을 받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Q.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거래지역/거래상대방 제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거래지역 제한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은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가격 이외의 조건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와 구별됩니다.

Q. 부당한 고객유인에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이익 제공 또는 제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표시·광고를 포함합니다. 제공되는 이익에는 적극적 이익의 제공뿐만 아니라 원래 부과되어야 할 요금·비용의 감면, 납부기한 연장, 담보제공 의무나 설정료의 면제 등 소극적 이익 제공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거래상 지위의 남용을 제재하는 것은 민법상 거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닌가요?

A. 거래상지위남용행위는 거래상지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민법의 불공정성 판단기준을 사업자간 거래관계에서 완화한 것이므로 거래상지위는 민법이 예상하고 있는 통상적인 협상력의 차이와 비교할 때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민사 행위 등과 구별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래 개시 단계에서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거래할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었는지와 계약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 하에 거래를 선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거래할 사업자를 여러 사업자 중 선택할 수 있었고 계약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거래를 개시하였고 계약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적 거래를 개시하기 위해 특정사업자와 거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② 거래 계속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가 있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불이익을 가한다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면 각종 불이익을 가하더라도 이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간 권리의무 귀속 관계, 채권채무관계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내용 등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II. 공정거래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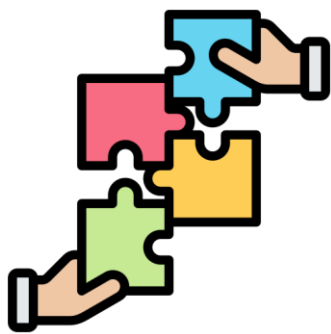
1.3.6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체크리스트

❖ 계열사, 관계사와의 거래 관련

항목	check
계열사, 관계사와의 거래를 비계열사, 비관계사와의 거래와 별도로 구별하여 협상부터 거래개시, 종료 과정까지 법 위반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한다.	
새로운 거래상대방을 결정할 때,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수의계약에 의해 진행할 경우, 다수 후보 사업자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가격 등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비교·평가하고, 이에 대한 증빙을 구비한다.	
당사의 내부거래 관리규정을 근거로 계열사 및 관계사 거래 업무를 수행한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는 모두 문서화하여 별도 보관한다.	
거래 대가가 예산 범위 내에 속하더라도 반드시 거래 대가의 적정성을 별도로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	
거래 조건을 검토할 때는 시중의 통상적인 수준을 확인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계열사 및 관계사와 계약할 때에도 다른 거래상대방과 동일하게 계약 불이행시의 페널티 조항을 포함한다.	
계열사 및 관계사에게도 이행기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독촉 및 지연이자 지급 등 책임을 묻는다.	
계약 종료 후 자동 기간 연장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도, 최초 계약 체결과 마찬가지로 거래조건의 객관성, 적정성을 검토하여 갱신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근거를 문서화한다.	

II. 공정거래법규

1.4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



1.4.1 개요

- 기업결합이란?
 - 개별기업의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기업간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을 의미
 - 통칭 M&A(Mergers and Acquisitions)라고 칭함
- 기업결합 심사의 목적
 - 경쟁사업자와의 결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획득할 목적으로 기업결합이 이루어 지는 경우, 시장의 경쟁제한성 시정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심사 및 승인이 필요함

1.4.2 기업결합 수단

구분	설명
주식취득·소유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20%(상장회사 15%)이상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임원겸임	대규모회사의 임원·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합병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영업양수	다른 회사의营业을 양수하는 경우
회사설립 참여	새로운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외의 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 분할에 따른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제외)

II. 공정거래법규

1.4.3 신고제도

- 신고요건
 - 규모 기준: 결합당사회사 중 한 회사의 자산총액(또는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이고, 다른 회사의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 거래금액 기준: 자산총액(또는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억원 미만인 회사를 결합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천억원 이상이고 해당 피취득회사가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 신고 필요

- 유형별 신고시기

구분	신고 의무자	기업결합 유형	신고 시기
사전 신고	대규모 회사	주식취득	계약일 완료 후 이행 완료 전
		합병	
		영업양수	
		회사 신설 참여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이행 완료 전
사후 신고	대규모 회사	임원 겸임	겸임 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대규모 회사 외의 자	주식취득	주권 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합병	합병 등기일부터 30일
		영업양수	대금지불 완료일부터 30일
		회사 신설 참여	주금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30일

-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시(신고기한 후 신고) 1억원 이하의 과태료

II. 공정거래법규

1.4.4 심사

- 신고절차
 - 공정위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90일까지 연장 가능)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
 -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되므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
- 경쟁제한성 심사기준

형태		고려사항
수평 결합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 도입 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 시장 존재여부 위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직 결합	원재료나 상품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간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의 봉쇄 효과-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위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혼합 결합	수평·수직 결합 이외의 기업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재적 경쟁의 저해 효과-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진입장벽의 증대 효과 위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II. 공정거래법규

1.4.5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조치

- 시정조치
 - 결합금지: 가장 강한 조치로서 해당 기업결합 자체를 불허
 - 조건부 승인: 구조적 조치(자회사 또는 보유자산 매각 등), 행태적 조치(일정기간 동안 가격인상 제한 등)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면서 기업결합은 승인
- 시정조치 불이행시 제재조치: 이행강제금 부과(행정제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형사벌칙)

관련 심결례



국내 D 항공사 및 A 항공사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불이행 제재

사실관계

D 항공사와 A 항공사의 기업결합은 노선 운수권의 타 항공사 이관,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여 2024년 조건부 승인되었다. 그러나 D 항공사와 A 항공사는 ‘공급 좌석수 축소’ 시정조치는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D 항공사와 A 항공사의 기업결합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 조치 중 “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총 54억 6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음

II. 공정거래법규

1.4.6 Q&A

Q.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다른 회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매출액이 320억원이며 상대방 회사의 매출액이 3,500억원 정도로 저희보다 큰 회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업결합신고를 해야하나요?

A. 기업결합의 신고대상은 신고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대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됩니다.

Q. 기업결합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예외적으로 당해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피해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의 효율성 증대 효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효율성 증대 효과는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합니다.
- (2) 효율성 증대 효과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야 하며, 단순한 예상 또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발생이 거의 확실한 정도임이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3) 효율성 증대 효과는 당해 결합이 없었더라도 달성할 수 있었을 효율성 증대 부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업결합의 예외로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 (2)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II. 공정거래법규

Q. A사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B사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A사의 시장점유율은 34%, B사의 시장점유율은 18%로 결합 이후 1위 사업자가 되고 결합 이후 2위 사업자인 C사의 시장점유율이 36%라고 할 때 당해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추정되나요?

A. 기업결합 이후 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52%로 1위 사업자가 되고, 2위 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16%로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25%인 13%를 초과하기 때문에 당해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추정됩니다.

Q. A사가 B사로부터 자산을 양수하여 C사에 매각하려고 합니다. A사와 B사간 자산 양수 계약 후 A사와 C사간 자산 양도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A사의 B사에 대한 잔금 지불과 C사의 A사에 대한 잔금 지불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기업결합신고는 누가 해야하나요?

A사 : 자산총액 3천 억 이상 2조 원 미만인 회사

B사 : 자산총액 3백 억 이상 3천 억 미만인 회사

C사 :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

A. 당해 사례에서 A사의 B사 영업 양수는 대금지급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하여야 하나, A사는 신고기간 중에 해당营业을 C사에 다시 양도하게 되어 신고요건을 상실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별도로 기업결합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C사의 A사로부터의 영업 양수는 이와 별개의 건으로 C사에게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C사는 대규모 회사이므로 사전신고 대상입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20% 이상 주식 취득으로 이미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는데도 신고 이후 상대 회사의 증자 또는 주식 매각 등으로 지분율이 20% 미만이 되었을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A. 주식 소유 또는 취득으로 인한 기업결합 신고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정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업결합 신고 후, 보유주식의 매각 등의 사유로 지분율이 20% 미만으로 감소한다 하여도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새로운 회사 설립에 A사가 40%, B사가 30%, C사가 30%를 출자할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B사와 C사는 계열회사 관계인데 이러한 사실이 신고 의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나요?

A. 신설 회사 설립의 경우에는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식취득 또는 회사설립 참여의 경우,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B사와 C사가 계열회사 관계에 있어 60% 지분을 가진 최다출자자가 되고, 두 회사 모두 신고의무대상회사가 됩니다.

다만,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하나를 신고대리인으로 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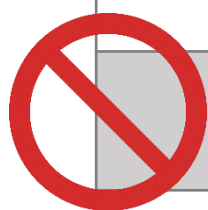
II. 공정거래법규

1.4.7 Do&Don'ts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Do)

- 의결권 없는 주식(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을 취득하는 경우
(단, 이후 의결권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사후신고대상)
- 주식의 취득과 동시에 재매각하거나 기업결합 신고기간 중 재매각하는 경우
- 계열회사 간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대규모회사가 아닌 회사의 임직원이 대규모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사외이사가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임하는 경우
- 최다출자자인 신고 회사 자체가 신고 요건인 신고대상 회사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특수관계인만 회사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



기업결합 신고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Don'ts)

-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 20%(상장법인은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이미 20%(상장법인은 15%) 이상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었으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다른 회사와 신설 · 흡수 · 분할 합병을 하는 것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대규모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것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양수, 임차하는 것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II. 공정거래법규

2 하도급법



하도급법 전문 확인하기

2.1 제정 목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상 지위 차이로 인한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2.2 주요내용

2.2.1 키워드

구분	설명
하도급거래	기업이 다른 기업에게 제조, 수리, 건설, 용역을 위탁하고,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 수리, 건설, 용역 수행하여 납품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
원사업자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에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
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
기술자료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및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하도급대금연동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것

II. 공정거래법규

2.2.2 원사업자 의무사항

- 서면 발급 및 서류 보존(법 제3조)
 -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양당사자가 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전사 서면 포함)을 위탁업무 개시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함
 - 서면기재사항



Do&Don'ts	기재사항	check
	위탁일 및 목적물의 내용	
	납품 또는 제공 시기 및 장소	
	목적물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및 기일	
	원사업자가 원재료 제공할 경우, 원재료의 품목, 수량, 제공일, 대가 및 지급방법과 기일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서류의 보존

3년간 보존	계약서
	수령증명서
	목적물 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대금 지급일 · 지급 금액 및 지급 수단 (어음으로 지급 시,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 포함)
	선금금, 어음할인료, 수수료, 관세 등 환급액, 지연 이자의 지급일 및 지급 금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공제한 경우, 제공한 원재료 등의 내용, 공제일·공제 금액·공제 사유
	감액한 경우, 감액 사유·기준·대상 물량·금액·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의 사본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 조정 금액 및 사유
	수급사업자 등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 내용 및 협의내용, 조정 금액 및 조정 사유
	입찰 명세서, 견적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서류

II. 공정거래법규

7년간 보존	기술 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목적·권리귀속관계·대가 및 대가 지급 방법·명칭 및 범위·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의 사본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에 따른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서류



하도급계약 추정 제도(법 제3조 제8항)

-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
- 수급사업자는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법정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 내용의 확인 요청 가능
- 원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도과하면 인정한 것으로 추정함

관련 심결례



S사의 서면 지연 교부 행위 제재

사실관계

S사는 2014.1.15.~ 2015.11.2. 기간 동안 A사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후 1일~29일이 지나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사실이 있음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므로 원사업자의 계약요청서 송부만으로는 서면의 발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지연발급한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시정명령을 부과함

II. 공정거래법규

- 선금금 지급 의무(법 제6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경우, 선금금을 받은 15일 이내(법정지급기일) 지급
-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 의무(법9조)
 -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 타당하게 결정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

관련 심결례



J사의 선금금 지급 위반 행위 제재

사실관계

건설회사인 J사는 발주자로부터 선금금 14억을 수령하였으나, 선금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하는 3억 6,42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공정위 판단

J사의 행위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수령한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산정된 선금금을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J사에게 재발방지 및 대금지급 명령을 내림

II. 공정거래법규

-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법 제13조)
 - 법정지급기일의 결정
 -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
지급기일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로 정한 경우	약정한 지급기일
지급기일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후로 정한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되는 날

-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
 -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는 15일) 초과 지급 시 지연이자(연 15.5%)



- 지급수단에 따른 금지사항

현금지급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금지
어음지급	-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 교부 금지 - 60일이 초과한 시점부터 어음의 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기일까지 어음할인요(연 7.5%) 또는 어음대체수수료 지급

II. 공정거래법규

관련 심결례



N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제재

사실관계

N사는 B사로부터 다운점퍼 2가지 품목을 제조위탁한 후 60일 후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기 납품한 제품에서 털 빠짐 현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반품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현재까지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N사가 목적물 수령 후 1개월 이상이 경과한 물품에 종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B사에게 지체 없이 지급할 것을 명령함

관련 심결례



S사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제재

사실관계

S사는 13년 동안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190건 하도급계약의 대금과 그 지급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작업 개시 이후에 발급하였음. 또한 6개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수령 후 수령확인서를 미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 지급했음에도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S사가 수급사업자들에게 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3천 8백만 원), ②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③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였음

II. 공정거래법규

2.2.3 원사업자 금지사항

- 부당특약의 금지(법 제3조의4)
 -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 설정 금지



Do&Don'ts	금지 약정	check
	서면 미기재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약정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약정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약정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법 제4조)
 -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Do&Don'ts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하는 행위	check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 결정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공제하여 대금 결정 → ‘협조요청’ 등의 표현도 일방적인 행위로 간주함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 결정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유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대금 결정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 대금 결정	
	경쟁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 결정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대금 결정	

II. 공정거래법규

- 물품 등의 구매 강지 금지(법 제5조)
 -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 부당한 위탁 취소의 금지(법 제8조)
 -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 금지



Do&Don'ts	부당 반품으로 간주하는 행위	check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행위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 감액 금지(법 제11조)
 -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Do&Don'ts	부당 감액으로 간주하는 행위	check
	계약 시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	
	단가 인하에 관해 합의한 경우,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부분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대금을 감액	

II. 공정거래법규

- 물품 등의 구매 강제 금지(법 제5조)
 - 목적물 등에 대한 품질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금지
- 부당한 위탁 취소의 금지(법 제8조)
 -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 금지



Do&Don'ts	부당 반품으로 간주하는 행위	check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행위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 감액 금지(법 제11조)
 - 정당한 사유가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 감액 금지



Do&Don'ts	부당 감액으로 간주하는 행위	check
	계약 시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	
	단가 인하에 관해 합의한 경우,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부분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대금을 감액	

II. 공정거래법규

하도급대금을 현금 지급 또는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사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대금을 감액	
목적물 위탁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이 납품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	
경영 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교부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 청구의 금지(법 제12조)

- 위탁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자기로부터 사게 한 경우, 부당결제청구 금지



Do&Don'ts	부당 결제청구로 간주하는 행위	check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게 하는 행위	
	자기가 구입,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행위	

■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법 제12조의2)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금지

II. 공정거래법규

관련 심결례



S사의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제재

사실관계

S사는 2015.11.5.부터 2018.11.4. 기간 동안 C사 등 142개 수급사업자에게 철의 장품, 배관류, 전장품 등에 대한 제조를 위탁한 후 발주처 요청 등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음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변경과 발주처 요청의 경우는 전적으로 S사 측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S사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며, 사내 협력사들이 사용하는 사내 게시판 및 S사 홈페이지 화면에 팝업 형태로 게시하도록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3,614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관련 심결례



H사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제재

사실관계


H사는 너트 부품 4종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어떠한 하도급계약서나 발주서도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고, 모든 거래 내용을 구두로 전달하였음.

또한, H사는 하도급대금을 당좌어음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음

공정위 판단

H사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각각 하도급법 제3조 및 제11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공정위는 H사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 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감액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함

II. 공정거래법규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법 제12조의3)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아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해당 서면을 반드시 교부해야 함



Do&Don'ts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check
	기술자료 요구 목적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 지급 방법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 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의 필수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해야 함



Do&Don'ts	기술자료 취득 후 금지행위	check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II. 공정거래법규

관련 심결례



M사의 기술자료 요구절차 위반 행위 제재

사실관계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인 M사는 화장품 제조업자인 C사에 ODM 방식으로 워터드롭 핸드크림 등의 화장품 제조를 위탁하였음. 이 과정에서 9개 화장품의 전성분(성분 전체) 및 함량(%)이 포함된 기술자료(이하 ‘전성분표’)를 요구하여 제공받을 때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음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산업에서는 최초로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규정을 위반한 M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또한 본 사건에서 기술자료 요구는 법에서 규정한 절차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였음

관련 심결례



H사의 기술자료 요구 위반 행위 제재

사실관계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제조하는 H사는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해외 진출 제안을 거절하자, A사의 기술자료 5건을 협의 없이 경쟁사업자인 B사에 제공하여 부품 개발에 참고하도록 하였음. 또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 C사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기도 하였음

공정위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 없이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등은 기술자료 요구 위반행위로서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H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II. 공정거래법규

■ 만화로 보는 기술자료 요구행위



II. 공정거래법규

- 부당한 대물 변제의 금지(법 제17조)
 -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 금지
-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법 제18조)
 -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 금지



Do&Don'ts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하는 행위	check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u>공정위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u> 를 요구하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



- ✓ 목적물 납품 원가 관련 정보
 - : 원가계산서, 재료비 및 노무비 세부지급내역 등
- ✓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매출 관련 정보
 - :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 ✓ 경영전략 관련 정보
 - : 제품 개발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
- ✓ 영업 관련 정보
 - : 거래처 명부, 납품조건(금액, 수량 등) 등
- ✓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 : 고유식별명칭 등

II. 공정거래법규

- 보복조치의 금지(법 제19조)
 - 수급사업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에 신고한 행위
 -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혹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을 신청한 행위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
 - 우회적인 방법에 의해 실질적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금지
 -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대금 연동과 관련된 서면 교부 회피 금지

2.2.4 위반 시 제재

-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 명령,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령
 - 과징금: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 : 3년간 법 위반 3회 이상 & 벌점 4점 초과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 3년간 벌점 5점 초과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 3년간 벌점 10점 초과

II. 공정거래법규

- 과태료 부과
 - 조사 불출석자, 자료제출명령 불이행·허위자료 제출자
: 사업자 1억원 이하, 임직원 및 이해관계인 1천만 원 이하
 - 조사 거부·방해·기피한 자
: 사업자 2억원 이하, 임직원 및 이해관계인 5천만원 이하
 -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 요구한 자
: 원사업자 5천만원 이하, 임직원 및 이해관계인 500만원 이하
 -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자료 제출한 자
: 원사업자 500만원 이하
 - 질서유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
- 사법적 제재(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 하도급대금 2배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 3억원 이하의 벌금
 - 보복조치 금지 위반
 -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정위의 시정명령 미이행
 - 경영간섭, 탈법행위 금지 위반
 - 손해배상 책임: 손해액의 3배 배상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기술자료 제공요구, 보복조치

II. 공정거래법규

- 금지청구 제도 도입(법 제34조의 2, 2025.12.17 시행)
 -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과 같은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그 원사업자에 대해 법원에 자신과 관련된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특히 기술자료 유용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 설비를 폐기 및 제거 조치도 청구할 수 있음



II. 공정거래법규

2.3 하도급대금연동제

2.3.1 개요



주요 원재료의
가격에 대해서

하도급대금연동이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으로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



2.3.2 키워드

구분	설명
원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의 제조 등을 위해 구매하는 원료와 재료- 최종재의 일부를 이루거나, 생산의 과정에서 형태가 변형되어 최종재에 결합 또는 최종재의 구성성분을 이루는 것
주요 원재료	목적물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
주요 원재료의 비용	계약 체결 시점에 수급사업자가 원재료를 구입하는 데에 드는 비용(부가세 포함)
목적물	하도급대금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최종 납품하는 것
조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동 대상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 이 비율은 10% 이내여야 함

II. 공정거래법규

기준지표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
하도급대금연동 산식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동분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

원재료의 범위와 예시



- 1) 천연재료: 금, 철, 구리, 원유, 원목 등
 - 2) 화합물: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 3) 천연재료 또는 화합물을 산업용으로 가공한 물건:
금속강, 골재, 시멘트, 합성수지 등
 - 4) 위탁받은 제조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중간재: 기계부품, 나사, 반제품 등
- ※ 위 1~4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 주의

2.3.3 주요 내용

- 기본 원칙
 - 하도급대금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하도급거래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원재료라 하더라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연동제 적용할 수 있음
- 연동제의 적용
 - 연동제 적용의 필수전제 조건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충분한 협의” 임
 - ★ ★ ★
 - 협의, 체결, 시행 모든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는 반드시 보존

II. 공정거래법규

- 하도급대금연동제의 절차



상호 협의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제 적용 여부에 대한 충분한 협의
- 이때, 협의와 관련된 증빙은 반드시 보관



연동약정

체결 및 발급

- 상호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표준 연동계약서 작성
- 필수 기재사항을 반영하여 약정서 및 연동표 작성



원재료

가격변동

- 연동계약서에서 정한 조정일마다 연동대상 원재료 가격 지표의 변동률 확인



약정에 따라

대금조정

-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목적물의 하도급대금 산출
- 원사업자는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대금 반영일에 조정된 하도급대금 적용



조정대금

지급

- 원사업자는 표준 연동계약서에 기재된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 납품되는 목적물에 대해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II. 공정거래법규

- 연동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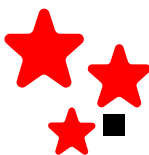


구분	내용	check
목적물 등의 명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한 것의 명칭	
주요 원재료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는 원재료	
기준지표	주요 원재료의 가격 증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산정을 위해 기준이 되는 시점 비교시점: 조정주기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을 확인하는 시점	
조정요건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협의하여 정한 변동 비율)	
조정주기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	
조정일	조정주기에 따라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	
조정대금 반영일	목적물에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	
연동 산식	연동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을 산출하는 산식	
반영비율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	
기타사항	위 항목 외 하도급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	

II. 공정거래법규

- 연동 예외 사유

연동 예외 요건
원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하도급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미연동하기로 합의한 경우 → 이 경우, 미연동하기로 한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기재해야 함



- 성실한 협의 의무(법 제3조제3항)

-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하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성실히 협의해야 함
- 성실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예
 - 연동에 관한 협의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
 -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등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권한 있는 책임자(계약 관련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등



II. 공정거래법규

2.3.4 Q&A

Q.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으나 당사는 하도급법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므로, 하도급법에 따른 선급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1항에서는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선급금을 지급받을 방법은 없나요?

A. 하도급법 제13조 제11항은 중견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법 시행령 별표1의 연간매출액 미만인 중견기업이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연간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부터 10항까지 및 제19조 등을 적용할 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자는 원사업자로,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제13조 제11항은 예외적으로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을 같은 조 같은 항에 나열된 일부 조항을 적용할 때 수급사업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법 제6조는 법 제13조 제11항에서 나열하고 있는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바, 법 제6조는 중견기업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합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저희 회사는 제조 위탁을 A회사로부터 수급 받아 목적물을 생산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보내둔 상태며, 검사결과를 원사업자로부터 통지 받아야만 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검사에 대한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있는지와 그 검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하도급법 제9조 제2항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법에서 정한 시한 내에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보며, 이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으로써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로 인한 대금 채무도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대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검사 기준은 하도급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A군에서 발주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도급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의 체결 과정에 있어 먼저 견적 입찰을 실시하였고 계약 과정에 있어 우리 사보다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한 업체가 있다고 하며 계약금액을 감하여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하여 부득이 감액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A.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시하였던 견적 입찰이 경쟁입찰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A회사는 비인기 제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나중에 인기 제품의 납품 단가를 인상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구두)하였으나 정작 손실의 일부만을 보전해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도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나요?

A.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4호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손실을 보전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보전해줄 것처럼 기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할 것이며 하도급법 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원사업자인 A회사는 저희 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을 두어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저희 회사에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 아닌가요?

A.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민·형사상의 요구 및 부대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약정,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발생한 진료비, 노무비, 산업재해자 및 유가족과의 합의, 산업재해 처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의 전형적인 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Q. 선급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의 차이가 존재하나요?

A.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합니다.

이와 달리,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내에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어음교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어음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부과합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A건설은 수십 개의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적인 이익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지만 예를 들어 현재 공사중인 아파트가 미분양이 될 경우 이를 구매 조건으로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위반이 아닌지요?

A. 하도급법 제12조의2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조의 입법 취지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부담을 강요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내세워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없는 일방적인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형태로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A건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은 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Q. 발주자가 지급한 어음이 타인 발행의 어음인 경우, 그 지급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발주자가 타인 발행의 어음으로 도급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어음의 지급 기간은 원사업자가 어음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만기일까지로 봅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고객사(A)가 협력사(B)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타 업체(C)에게 전달한 경우입니다. C는 A와 B 사이의 유통업체이며, C는 해당자료의 출처 등에 대해 사전공지 받지 못하였고, B의 기술자료 여부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1-1) 자료를 수취 받은 C 업체도 기술 문서의 관리 의무가 있나요?

1-2) C사가 해당 자료를 입찰 등을 위하여 타 업체(D)에게 공개했을 경우 기술자료 유용/유출 행위로 판단되나요?

2. 기술 자료의 형태가 문서가 아닌 경우에도 기술자료 범주에 포함되나요?

A. C는 B와의 관계에서 원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C는 하도급법에 따른 기술자료 보호 의무가 없고, C에게 기술유용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A가 C의 행위를 지시하였거나, C의 행위를 충분히 예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A에게 기술유용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C는 특허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업비밀 유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료는 반드시 문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가, 납기 정보는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기술 자료의 정의에 의거 기술 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에서 기술 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저희 회사는 수급사업자로 A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어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 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또는 용역 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목적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장비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부당한 물품 구매강제행위에 해당하나요?

A. 발주자나 고객이 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 의뢰시 특정 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물품의 구매강제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성금을 지급한 경우, 그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는 경우 선급금 일부가 당해 기성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당해 기성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를 부과합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선급금은 항상 지급해야 하나요?

A.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와 달리,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품목이나 공사 부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는 전체 공사대금 중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A.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Q.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어떠한 비율로 지급해야 하나요?

A.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현금 비율을 산술 평균한 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현금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 특정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공급되는 발주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현금 비율을 적용하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 비율을 산술 평균하여 적용합니다.

Q.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약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나요?

A.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 변동과 관련 추가금액을 지급받고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약정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주지 않은 경우는 법 위반행위입니다.

Q. 부당한 경영간섭금지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A.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당해 행위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조 등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 정보가 절차적 ·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요구되는 정보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정보제공의 목적과 무관한 일부 내용을 삭제한 상태로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상태의 경영상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II. 공정거래법규

Q. 포괄적으로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제조 위탁을 요구하고 그 발생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부당 특약에 해당하나요?

A. 원사업자가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의 위법성은 원사업자가 산출내역서 외의 다른 서류에 반영한 사항이나 산출내역서에 포괄적으로만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 수행을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견적 누락(단가 미기재 등) 또는 견적 착오(규격·수량·단위 등 오기)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경우는 제외합니다.

Q.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하도급법 제3항에 따른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 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 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상기 위탁 내용 확인 요청 서면을 통지 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만약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II. 공정거래법규

2.3.5 하도급법 관련 체크리스트

❖ 서면 기재사항 관련

기재사항	check
위탁일 및 목적물의 내용	
납품 또는 제공 시기 및 장소	
목적물 검사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및 기일	
원사업자가 원재료 제공할 경우, 원재료의 품목, 수량, 제공일, 대가 및 지급방법과 기일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부당특약 금지 관련

금지 약정	check
서면 미기재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약정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약정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는 약정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	

II. 공정거래법규

❖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관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하는 행위	check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 결정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공제하여 대금 결정 → ‘협조요청’ 등의 표현도 일방적인 행위로 간주함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대금 결정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유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대금 결정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해 대금 결정	
경쟁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 결정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대금 결정	

❖ 부당 반품 금지 관련

부당 반품으로 간주하는 행위	check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 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반품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행위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II. 공정거래법규

❖ 부당 감액 금지 관련

부당 감액으로 간주하는 행위	check
계약 시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고 위탁 후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	
단가 인하에 관해 합의한 경우,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부분에 대해 소급 적용하여 대금을 감액	
하도급대금을 현금 지급 또는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사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대금을 감액	
목적물 위탁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이 납품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	
경영 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부당 결제청구 금지 관련

부당 결제청구로 간주하는 행위	check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게 하는 행위	
자기가 구입,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행위	

II. 공정거래법규

❖ 기술자료 요구시 필수 기재사항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check
기술자료 요구 목적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 지급 방법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 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 기술자료 취득 후 금지행위

기술자료 취득 후 금지행위	check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부당 경영간섭 금지 관련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하는 행위	check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로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u>공정위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u> 를 요구하는 행위	

II. 공정거래법규

❖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서 필수 기재사항

구분	내용	check
목적물 등의 명칭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한 것의 명칭	
주요 원재료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되는 원재료	
기준지표	주요 원재료의 가격 증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지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산정을 위해 기준이 되는 시점 비교시점: 조정주기에 따라 원재료 가격 변동을 확인하는 시점	
조정요건	연동을 시행하는 요건(협의하여 정한 변동 비율)	
조정주기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연동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	
조정일	조정주기에 따라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	
조정대금 반영일	목적물에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	
연동 산식	연동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을 산출하는 산식	
반영비율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	
기타사항	위 항목 외 하도급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	

III. 사업관련 법규

1

화장품법



1.1 정의

- 개념 및 목적: 화장품의 제조·수입·판매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장품의 특성에 부합되는 적절한 관리와 동 산업의 경쟁력 배양을 위한 법
- 구성: 총 6장 4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장품법 하위법령으로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존재

1.2 개요

1.2.1 용어설명

- 화장품
 -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
 - 단, 인체에 적용하더라도, 치료·처치·증상경감·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에 해당

- 일반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의 구분

기능성화장품	- 주름개선
	- 미백
	- 곱게 태워주는 기능,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 여드름 완화(인체세정용 제품)
	- 피부장벽의 기능회복
	- 트살로 인한 붉은 선을 얹게 하는데 도움
	- 염모제, 탈염, 탈색제
	-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 제외)
일반화장품	- 제모제(화학적 체모 제거)
	기능성화장품 외 모든 화장품

III. 사업관련 법규

■ 화장품의 유형

유형	영유아용	목욕용	체취 방지용
	인체 세정용	눈화장용	체모 제거용
	방향용	두발염색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

화장품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해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1.2.2 제조업의 등록

■ 화장품제조업 등록 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장품제조업의 등록이 불가능
1.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화장품제조업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마약류의 중독자
 4. 화장품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
 5.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III. 사업관련 법규

■ 화장품제조업의 등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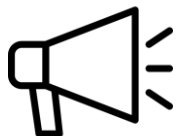




-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기재사항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화장품제조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것)
 3. 상호(법인명)
 4. 제조소의 소재지
 5. 제조 유형

■ 화장품제조업의 변경등록




- 등록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변경등록을 해야 함
 1. 화장품제조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변경)
 2. 상호(법인명) 변경
 3.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4. 제조 유형 변경
-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 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

1.2.3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 화장품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책임판매업자의 지도, 감독 및 요청에 따를 것
	-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보관할 것
	-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제조소, 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화장품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유지할 것
	- 작업소에는 위해 발생 염려 물건을 두어서는 안되며, 작업소에서 국민보건 및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유출·방출되지 않도록 할 것

III. 사업관련 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중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제출할 것. 단, 다음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1)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가 동일할 경우2) 화장품제조업자가 ODM 생산을 하는 경우, 품질·안전관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화장품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 상호 계약에 따라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 또는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제조 또는 품질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받아 유지·관리할 것

■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CGMP)

- 위의 화장품제조업자의 의무사항 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고시하는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제조업자에게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 적합업소로 선정할 수 있음

■ 화장품 제조시 안전기준

1) 안전한 원료 사용

-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 채택: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지정하고, 그 외 원료는 책임판매업자의 안전성 책임 하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 화장품 원료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성분사전에서 확인 가능(<http://kcia.or.kr/cid/main/>)
- 원료 사용기준의 변경신청
 - 화장품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등은 지정·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하거나, 지정·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을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III. 사업관련 법규

2)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와 보고

• 기능성화장품의 개념

종류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미백	① 멜라닌색소 침착을 방지해 기미·주근깨 등의 생성 억제하여 미백에 도움 ② 피부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색을 얹게 하여 미백에 도움
주름개선	③ 피부에 탄력을 주어 주름의 완화 또는 개선
피부를 곱게 태우거나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④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움 ⑤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
모발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	⑥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 탈색 포함, 일시적인 모발 색상 변화는 제외) ⑦ 체모를 제거(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제외)
피부나 모발의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방지 및 개선	⑧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코팅 등 물리적으로 굵게 보이게 하는 것은 제외) ⑨ 여드름성 피부 완화(인체세정용 제품류 한정) ⑩ 피부장벽의 기능 회복 ⑪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얹게 하는데 도움

-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또는 보고서 제출
 -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등은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기능성화장품 관련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
 -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음
 - 양벌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개인과 법인 모두 벌금형 부과

III. 사업관련 법규

1.2.4 화장품의 표시와 광고

■ 화장품 포장의 구분



출처: 생활법령정보

1차 포장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
2차 포장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

■ 화장품 포장에 기재·표시해야 하는 사항

화장품의 명칭	제조번호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가격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기재(문구 또는 도안)
사용시 주의사항	식약처가 지정하는 바코드
기능성화장품 효능/효과, 용법/용량	성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
인체세포/조직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	수입화장품의 경우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소재지
탈모/여드름성피부/피부장벽/튼살 개선 제품의 경우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는 경우 사용기준이 지정/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

- 반드시 1차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 화장품의 명칭
 - 영업자의 상호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연원일을 병행 표기해야 함)

III. 사업관련 법규

- 간략한 표시가 가능한 화장품
 - 다음에 해당하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만을 기재·표기할 수 있음

1)내용량이 10ml 이하 또는 10g 이하인 화장품

2)판매 목적이 아닌 소비자 시험·사용용 화장품
 - 단, 기재·표시를 생략하려는 경우 다음으로 대체할 수 있음

1)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기입

2) 전체 성분표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비치

기재·표시사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 위반자에 대한 처벌
 - 화장품 기재·표시사항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위반행위를 한 개인과 법인 모두 벌금형 부과

1.2.5 화장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

화장품 가격의 표시

- 가격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려는 자(판매자)가 판매하려는 가격을 제품 포장에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해야 함

기재·표시상의 주의사항


- 화장품의 기재·표시 및 화장품의 가격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정확히 기재·표시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음
-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할 것

구분	표시기준 및 방법
① 화장품의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된 것으로서 같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여러 제품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명칭 포함

Ⅲ. 사업관련 법규

구분	표시기준 및 방법
② 화장품 제조업자 및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필증에 적힌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 기재·표시 •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각각 구분하여 기재·표시(단, 각 영업자가 다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는 한꺼번에 기재·표기 가능) • 공정별로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생산된 화장품은 일부 공정을 수탁한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의 기재·표시 생략 가능 • 수입화장품은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를 국내 화장품제조업자와 구분하여 기재·표시
③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크기 5포인트 이상 •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기재(단, 1% 이하 성분·착향제·착색제는 순서 무관) • 혼합 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 • 색조 화장용, 눈 화장용, 두발염색용 또는 손발톱용 제품류에서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또는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표시 가능 •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 가능하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개별 명칭 표시 • 산성도(pH)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표시할 수 있고, 비누화반응을 거치는 성분은 비누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표시 가능 • 모든 성분을 기재·표시할 경우 영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식약처장에게 근거자료 제출, 승인 후 ‘기타성분’으로 표시 가능
④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기재·표시
⑤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무게가 포함되지 않은 용량 또는 중량을 기재·표시해야 함. 고체형태의 비누의 경우 수분을 포함한 중량과 건조중량을 함께 기재·표시

III. 사업관련 법규

구분	표시기준 및 방법
⑥제조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과 쉽게 구별되도록 기재·표시•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하는 경우 병행 표기해야 하는 제조연월일(맞춤형화장품의 경우 혼합·소분일)도 각각 구별 가능하도록 기재·표시
⑦기능성화장품의 기재·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탈모, 여드름성 피부, 아토피성 피부, 트살 완화 기능성화장의 경우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문구를 “기능성화장품” 아래에 표시(문구 크기는 “기능성화장품” 글자 크기 이상) <p>1) 표시기준(로고모형)</p> <div></div> <p>2) 표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안의 크기는 용도 및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배율로 조정-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 도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

■ 화장품 표시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

- 가격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양벌규정: 위반행위를 한 개인과 법인 모두 벌금형 부과

III. 사업관련 법규

1.2.6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 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

의약품 오인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에 대한 표시·광고 금지• 의사, 약사 등 의약분야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사용·개발 등을 한다는 내용 혹은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 금지
제품에 대한 허위사실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제품을 국내제품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러하다고 표현하는 표시·광고 금지•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만 사실임에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품질·효능에 관하여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 금지
기능성화장품· 유기농화장품· 천연화장품 오해 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능성화장품·유기농화장품·천연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해당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기타	<p>경쟁상품 비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교대상·기준 명확히 제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내용만 표시•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표현 금지• 사실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광고 금지 <p>부적절한 표현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금지• 국제적 멸종위기종 가공품 함유 암시 금지

III. 사업관련 법규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 표시·광고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
 - 화장품의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 함께 부과 가능
- 양벌규정
 - 위반행위를 한 개인과 법인 모두 벌금형 부과

1.2.7 화장품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 영업자의 실증의무

- 영업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어야 함

■ 표시·광고 실증대상

- 화장품의 포장 또는 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에 의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어 식약처장이 실증필요 인정을 한 표시·광고
-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영업자는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 제출

III. 사업관련 법규

■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

구분	실증자료의 범위 및 요건
① 시험결과	• 인체 적용시험 자료, 인체 외 시험자료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조사 자료일 것
② 조사결과	•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그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할 것
③ 실증방법	•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관련 산업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일 것

■ 실증자료 제출방법

- 다음 사항을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식약처장에게 제출
 1. 실증방법
 2. 시험·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실증내용 및 결과
 4. 실증자료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 화장품 표시·광고의 중지명령

- 실증자료 미제출 시 표시·광고의 중지명령
 - 식약처장이 실증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영업자의 표시·광고에 대해 중지를 명령
- 중지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
 - 중지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벌금형과 징역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음
- 양벌규정
 - 위반행위를 한 개인과 법인 모두 벌금형 부과 가능

III. 사업관련 법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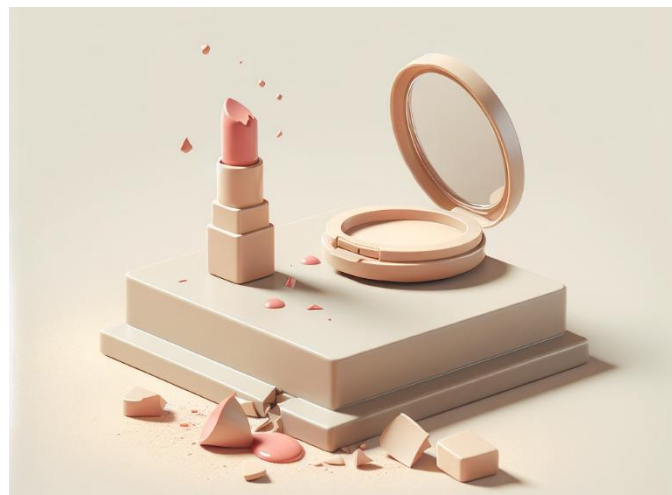
1.2.8 화장품의 유통·판매

■ 제조·수입·판매 등이 금지되는 화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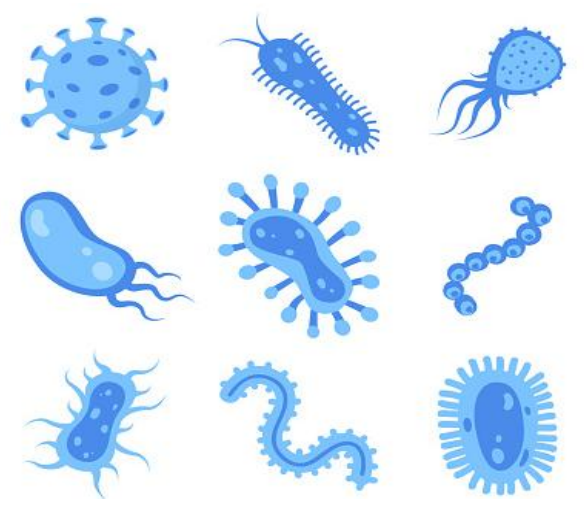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化妆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됨



심사 보고 미제출 기능성 화장품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화장품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이물이 혼입·부착된 화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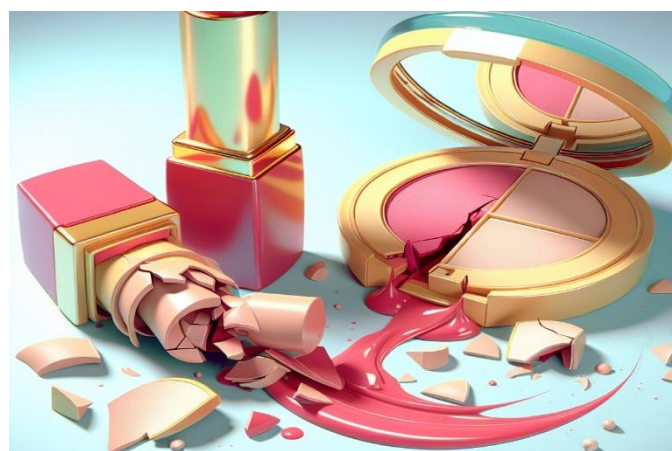
사용 금지 원료를 사용했거나
안전 기준 미준수 화장품



코뿔소 뿔·호랑이 뼈 추출물
사용 화장품



비위생적 환경 또는 기준 미달
시설에서 제조된 화장품



용기·포장 불량으로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



사용기한 위조·변조 화장품



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III. 사업관련 법규

■ 동물시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 포함) 또는 수입한化妆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음

■ 판매 등의 금지

- 누구든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化妆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됨
 1. 영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수입하여 유통·판매한 화장품
 2.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3. 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지 않고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4. 화장품의 기재사항, 가격표시 및 기재·표시상의 주의사항에 위반되는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표시된 화장품
 5.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 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소비자 판매 화장품에 한함)
 6.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맞춤형화장품 판매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 또는 위조·변조한 것

■ 견본품과 비매품 판매의 금지

-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함)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을 화장품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 소분 판매의 금지

-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해서는 안 됨

III. 사업관련 법규

■ 금지사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회수·폐기 명령

- 금지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

위반사항	벌칙
• 위 영업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 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중 1. 또는 4.를 위반한 자	
• 위 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중 2. 또는 3.을 위반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 소분 판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벌금형과 징역형 함께 부과 가능하며, 양벌규정 적용됨

■ 금지사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회수·폐기 명령

- 동물시험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위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회수·폐기 명령

- 식약처장은 판매·보관·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재료 등이 위 영업의 금지 및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영업자·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III. 사업관련 법규

■ 영업자의 위해화장품 회수 조치

- 영업자 의무: 안전용기·포장 등, 영업의 금지 또는 판매 등의 금지에 위반되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이 유통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회수 대상 화장품
 1. 안전용기·포장 기준에 위반
 2.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화장품이거나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3.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화장품 중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
 - 1)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 2)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5.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위조·변조한 화장품
 6. 그 밖에 영업자 스스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화장품
 7. 영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수입하여 유통·판매한 화장품

■ 위해화장품의 자진 회수시 행정처분의 감면

- 회수조치 성실 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1. 회수계획량의 5분의4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2. 회수계획량 중 일부를 회수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경감

III. 사업관련 법규

구분	경감내용
① 회수계획량의 3분의1 이상을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처분기준이 등록최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2개월 ~6개월 범위에서 처분• 행정처분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의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3분의2 이하 범위에서 경감
② 회수계획량의 4분의1 이상 3분의1 미만을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처분기준이 등록최소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3개월 ~6개월 범위에서 처분• 행정처분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의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1 이하 범위에서 경감

■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 위해화장품 회수 조치 및 회수계획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양벌규정 적용

1.2.9 화장품 분쟁해결 절차

■ 화장품 분쟁해결 개관

- 화장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방법
 1. 화장품 소비자와 사업자간 직접적 협의를 통한 해결
 2. 소비자단체 등 제3기관의 알선·조정·중재를 통한 해결
 3. 소송을 통한 해결

III. 사업관련 법규

■ 피해구제절차



III. 사업관련 법규

만화로 보는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행위



III. 사업관련 법규

■ 만화로 보는 화장품 표시·광고 위반 행위

화장품 피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처: 법제처-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https://www.easylaw.go.kr/CSP/ComicsRetrieval/e01.laf?webtoonNo=27&topMenu=openUI5>

III. 사업관련 법규

1.2.10 관련 판례

관련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고정1099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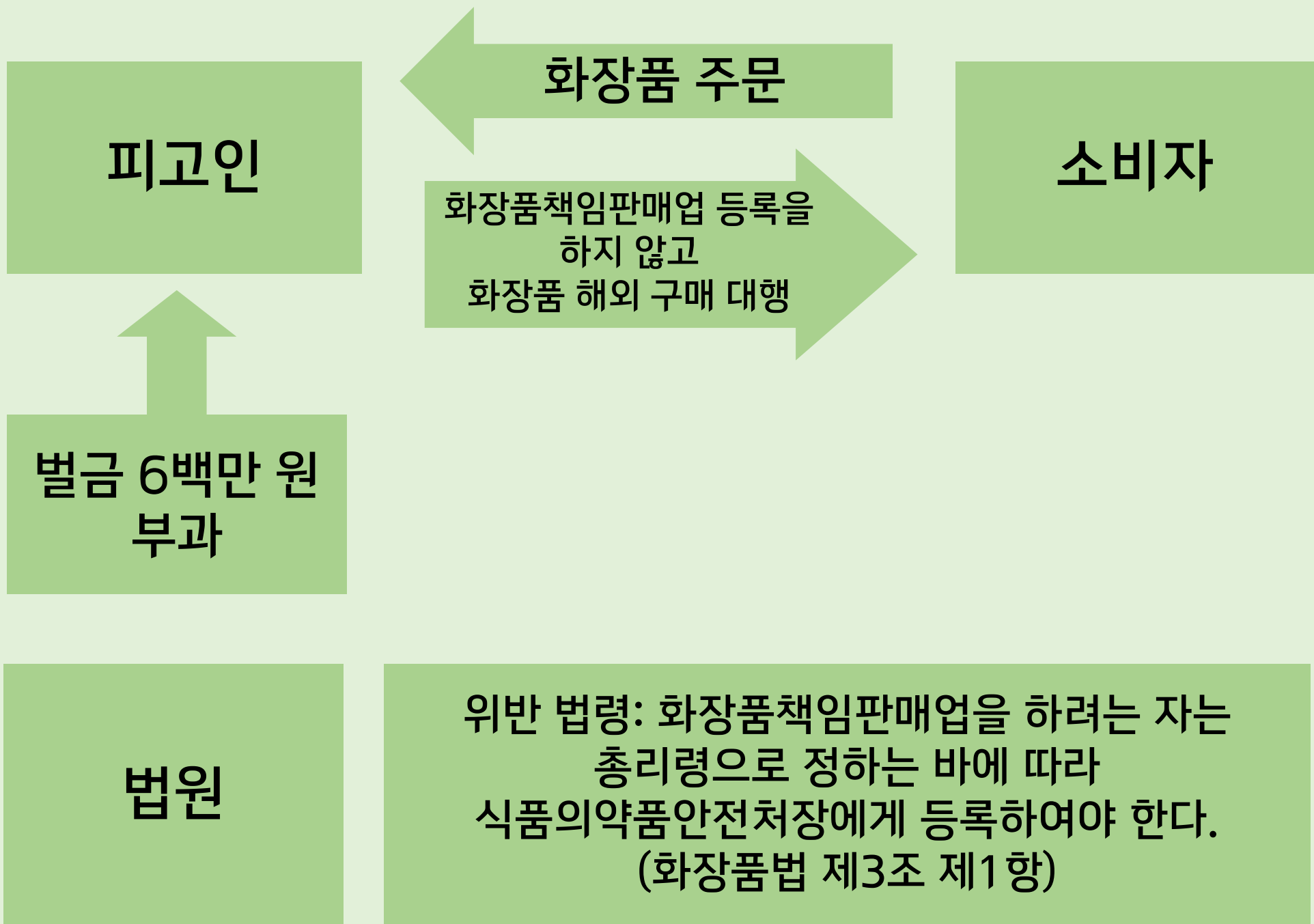


사실관계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을 하는 'D'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화장품책임판매업(수입대행형 거래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 화장품(향수)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해외 구매대행 목적으로 게시하고, 소비자가 이를 주문하면 구매 대행하여 해외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배송하는 방법으로 약 8개월 동안 3억 6천만원 상당의 화장품 약 3,000개를 알선, 수여함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없이 영업을 한 행위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6백만 원을 부과하였음



III. 사업관련 법규



관련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1고정190 판결

사실관계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약 2년 동안 위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B'에 대하여 '항산화,피부개선, 피부재생에 모두 탁월하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으며, 판시 사이트 내에 '피부와 의원과 피부과 전문의의 구체적 명칭과 자문의, 자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음

법원의 판단

일반소비자가 판시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에 각각 벌금형 100만 원을 부과하였음



관련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25. 선고 2016고정2140 판결

사실관계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견본(샘플)화장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 찾아온 손님에게 1개당 1,5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음

법원의 판단

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된 화장품(견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부과하였음

III. 사업관련 법규



관련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1고정190 판결

사실관계

회사원인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F몰’에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두피케어 남성용 앰플’ 제품을 광고하면서 ‘상품정보’란에 ‘약간 머리카락이 두꺼워졌고 M자 탈모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어요.’, ‘정수리뿐만 아니라 앞이마까지 훨씬 많이 모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위 제품 구매후기 글을 편집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제품을 광고하였음

대법원 판결

판시 광고를 보는 사람은 판시 제품이 기능성화장품 즉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화장품법 제2조 제2호 마.목)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함에 따라 피고인에 벌금형 100만 원을 부과하였음

* 사진은 사례와 무관한 예시입니다.



III. 사업관련 법규

1.2.11 Q&A

광고

Q. 화장품 광고에서 '피부개선'이라는 표현은 사용할 수 있나요?

A. '피부 개선'이라는 표현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제품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화장품 광고에 '천연성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천연성분이 실제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과장된 표현은 금지됩니다. 관련 자료를 통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장

Q. 세트 포장의 경우, 모든 제품의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세트 포장에서는 사용기한이 가장 빨리 끝나는 제품의 사용기한만 표시하면 됩니다.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가장 오래된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Q.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모두 성분을 표시해야 하나요?

A. 1차 포장에는 성분 표시가 필수는 아니지만, 2차 포장에는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고형 비누 등 소비자가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제품은 예외입니다.

Q. 화장품이 아닌 다른 물품(식품, 의료기기, 공산품 등)과 세트포장이 가능한가요?

A. 화장품법령 상 다른 물품과 묶음 판매(합포장 포함)하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품들이 상호 오염되거나 품질 및 안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화장품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적합하게 포장 및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의 1차 및 2차 포장에 기재되는 내용이 다른 물품과 연관되어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광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III. 사업관련 법규

- Q.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포장을 개봉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 A. 외부 포장의 전부가 투명하거나, 일부의 면이 투명 또는 개방된 형태로 제작되어 소비자가 2차 포장 등의 외부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도 화장품법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면, 외부 포장에 기재·표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식약처 보도자료

생산

- Q. 화장품 공장에서 다른 물품을 생산할 수 있나요?
- A. 화장품제조업자는 제품 상호간의 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화장품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화장품 이외의 물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제품 및 제조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교차오염 우려가 없도록 자체규정 및 근거자료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화장품이 아닌 다른 물품의 관련 법령에서 화장품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연구

- Q. 연구 중 화장품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 A. 사내 문의처는 RAS센터가 화장품법 관련 문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외부 문의처로는 대한화장품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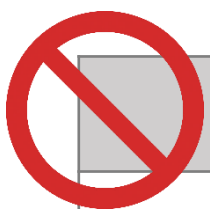
III. 사업관련 법규

1.2.12 Dos&Don'ts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Dos)

-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
 -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도안을 기재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Don'ts)

-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하려는 화장품제조업자
 -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 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 또는 변경심사를 받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III. 사업관련 법규

1.2.13 화장품법 관련 업무 체크리스트

점검 사항	점검 (O/X)
독립된 제조관리부서와 품질관리부서를 두고 각각 책임자를 두고 있는가?	
자체 교육 실시 및 주관 교육 참석 등은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가?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있는가?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원료 · 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의 관리는 적절한가?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의 관리는 적절한가?	
제조관리기준서·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전자문서 형식을 포함한다)를 작성·보관하고 있는가?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도록 제조소, 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화장품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작업소에는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소에서 국민 보건 및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유출되거나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가?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제조 또는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제조 또는 품질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받아 유지·관리하고 있는가?	

출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제조업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https://www.mfds.go.kr/brd/m_765/view.do?seq=45579&page=1)

[부록①]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콜마 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과 임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법경영원칙 및 사업관련 제반 법률의 준수를 위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업무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범위)

회사의 사업활동과 모든 임직원에게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라 한다)”이란 자율준수를 위하여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시스템으로서 임직원에게 대한 행동 기준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자율준수”란 회사의 임직원이 사업 관련 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 ③ “사업 관련 법 등”이란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각종 법령 및 회사의 규정이나 지침 등을 말한다..
- ④ “규제 당국 등”이란 사업 관련 법 등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말한다.
- ⑤ “CP위원회”는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 자율준수 활동 점검,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협의, 심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⑥ “자율준수관리자”란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⑦ “CP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지휘 아래에서 CP 업무를 주관하여 실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 ⑧ “현업부서”는 주관부서를 제외한 회사의 모든 부서를 말한다.

제2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 제4조(조직의 역할)

- ① “이사회”는 공정거래 관련 업무 수행에 적합한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부록①]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 1.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독립성을 보장한다.
- 2.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CP 운영실적 및 계획을 연 1회 이상 보고 받고 점검한다.
- ② “최고경영자”는 이 규정과 이사회가 의결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규모나 사업 성격에 부합하는 CP 체계를 구축·정비·운용하고 그 운영상황을 감독한다.
- ③ “CP위원회”는 전사 CP운영현황과 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숙지하고, 해당 안건을 각 사업 조직의 업무 수행 및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④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여 회사 CP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1절 최고경영자

■ 제5조(책임)

최고경영자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최고경영자는 CP 추진 및 운영에 있어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며, CP운영 상황에 대해 연 1회 이상 검토한다.
- 2. 최고경영자는 모든 임직원이 스스로 CP를 적극 실천하여 자율적인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CP 실천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내외에 의사 소통한다.
- 3.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면 사실을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권한)

최고경영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CP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 및 보고 요구권
- 2. CP 운영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보고 요구권
- 3. 기타 CP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자율준수관리자에 대한 업무 지시권

■ 제7조(의무)

최고경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관리·감독할 의무
- 3. 재임 시 및 퇴임 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비밀정보 누설 금지

[부록①]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제2절 자율준수관리자

■ 제8조(선임)

-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할 수 있다.
 1. 공정거래 업무에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2. 준법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이나 구매관련 업무를 겸직하지 않은 자
 3. CP 관련 통제 업무를 독립적이고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직급을 가진 자
- ③ 자율준수관리자의 결원 시 그 후임자는 제1항 이사회 승인을 받기 전까지 임시로 본 규정에 따른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의 결원 시 그 후임자 선임까지 주관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독립적 업무수행)

-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임기중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CP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적시에 보고할 수 있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제1항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최고경영자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권한)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직무상 권한을 가진다.

1. 자율준수에 관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의 시행
2. 자율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의 점검 및 보고
3. 직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정보 자료의 수집과 제출 요구 및 진술의 요구
4. 임직원에 대한 자율준수 요구 및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중지 개선 또는 시정의 요구
5. 사업관련 법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요청
6. 이 규정의 개정안 발의
7. 기타 이사회가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부록①]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 제11조(의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3. 재임시 및 퇴임 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비밀정보 누설 금지

■ 제12조(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CP의 운영과 관련된 계획 수립
2.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3. 자율준수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 요구
4. 사업 관련 법 등 및 이 규정과 관련된 임직원 교육
5. 자율준수 행동강령의 제·개정 및 운영
6. 자율준수 활동 상황에 기록 및 관리
7. 규제당국 등과의 업무 협조
8. 내부 고발 시스템 개발 및 관리
9. 주관부서인 준법지원팀 통솔 및 관리
10. CP 의 운영과 관련된 대외 인증 평가 업무 수행 (CP 등급평가, ISO, ESG 등)
11.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조치 수행
 - 가. 교육 미이수 누적 2회: 서면 경고
 - 나. 교육 미이수 누적 3회: 서면 경고 및 미이수 현황 CP위원회 보고
 - 다. 교육 미이수로 인하여 상기 나목에 따라 CP위원회에서 불이익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 라. CP위원회에서 불이익이 결정된 경우 그 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12.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3조(회사의 지원)

-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자율준수에 대한 문제나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부록①]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 ③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사업 관련 법 등이나 이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하는 경우 충분한 지원을 통하여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CP의 운영에 외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14조(주관부서)

-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주관부서를 둘 수 있다.
- ② 주관부서를 구성할 경우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관장한다.
 1. CP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계획, 운영
 2. CP 관련 규정 제·개정
 3. CP 점검 계획, 실시, 평가, 개선
 4. CP 교육 계획, 실시, 평가, 개선
 5. 현업부서의 CP 관련 자문 의뢰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행
 6. CP 관련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등의 작성 및 배포
 7. 공정거래 리스크 식별 및 평가
 8. CP 등급평가 계획, 실시, 개선
 9. CP위원회 및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10. 기타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 ④ 주관부서는 제3항의 실시 결과를 정기, 비정기적으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3절 CP 위원회

■ 제15조(CP 위원회 설치 및 구성)

- ① CP 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준수를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임직원의 포상과 제재, 기타 회사의 CP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안을 심의한다.
- ② CP 위원회는 대표이사 직속 자문기구로서, 관련부서의 임원으로 구성된 CP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CP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한다.
 2. CP위원회 위원은 자율준수관리자를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 부서 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사안에 따라 위원 구성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부록①]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③ 주관부서장은 간사로서 CP위원회의 실무 운영을 총괄한다.

■ 제16조(CP 위원회의 운영 및 역할)

① CP 위원회는 정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위원회: 반기 1회 개최하며 CP활동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의사 결정사안, 주관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 등 협의
2. 수시 위원회: 주관부서가 CP 관련 긴급성을 요하는 안건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 개최

② CP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율준수 기본방침 설정에 대한 심의·의결
2.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제재 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의 심의 및 재발 방지 등 필요 조치의 권고·자문
3.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점검(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 결과 공유 및 협조 논의
4. CP 관련 사내 규정·지침 등의 제·개정에 대한 심의·의결
5. CP 모범 임직원의 포상 또는 위반 임직원의 제재에 대한 심의
6. 기타 회사의 자율준수를 위하여 회부되는 안건에 대한 심의

③ CP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주관부서 담당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 제17조(CP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주관부서는 CP 위원회의 소집 일시, 장소 등을 개최 1 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CP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가 동수될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절 사전업무협의체(자율준수협의회)

■ 제18조(설치 및 구성)

① 자율준수협의회는 업무 등의 수행 전 공정거래 법규 및 사업 관련 법 위반소지가

[부록①]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감독하고 위반사항 발생시 이를 자율준수관리자 및 CP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하기 위한 사전감시체계이다.

- ② 자율준수협의회는 사업 관련 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검토할 때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준법지원팀과 미리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한다.
- ③ 자율준수협의회는 공정거래 관련 부서 실무진으로 구성하며, 협의 사안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가 지명하는 임직원으로 구성된다.

■ 제19조(자율준수협의회의 운영 및 역할)

- ① 자율준수협의회는 정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정기 협의회: 반기 1회 개최하며, CP 활동 관련 법 위반 소지에 대한 감시 및 CP 위원회 보고 안건 등 협의
 - 2. 수시 협의회: 주관부서가 CP 관련 긴급성을 요하는 안건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 개최
- ② 자율준수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율준수협의회 역할을 수행한다.
 - 1. 관련 업무 수행 전, 공정거래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 검토
 - 2.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수행
 - 3. CP 관련 사내 규정·지침 등의 변경에 대한 의견 개진
 - 4. CP 위반 위험성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필요 조치 수행
 - 5. 기타 회사의 자율준수를 위하여 회부되는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토의 및 적용
- ③ 주관부서는 자율준수협의회의 운영 현황, 기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4절 임직원

■ 제16조(의무)

- ① 임직원은 투평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공정거래의 척도임을 인식하고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 정착과 법 위반 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이 규정 및 사업관련 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본인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는 행위

[부록①]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2. 다른 임직원에게 대해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지시하는 행위
3. 본인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또는 다른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인지하고도 주관부서에 제보하지 않고 묵인하는 행위
- ③ 회사,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주관부서가 진행하는 CP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나 정보의 제출, 또는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전에 자율준수관리자(또는 주관부서)의 자문을 받거나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운영

■ 제21조(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 천명)

-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에게 대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연 1회 이상 천명하여야 한다.
- ②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자율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 할 수 있도록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을 준수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자율준수 의지를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하여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CP 주관부서, 법 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 등에게 CP 실천의지를 사업목표에 반영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제22조(자율준수편람)

-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CP의 기준과 절차 및 사업 관련 법 등을 포함한다.
- ② 자율준수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한다.

[부록①]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 ③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요소를 연 2회 이상 검토하여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하며, 임직원을 대상으로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3조(모니터링 제도)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매년 1 회 이상 이 규정 , 사업 관련 법 등 에 대한 위반 행위의 예방 또는 조기 발견을 위하여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이 규정 , 사업 관련 법 등 에 대한 위반 우려가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주관부서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CP의 준수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임직원의 자율준수 실태 등에 대한 상시 점검, 조사
 - 2.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각 부서별로 작성한 각종 체크리스트 및 규범준수 리스크 평가서의 검토 및 확인
 - 3.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 위반 및 부패 관련 행위가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다.
- ⑤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니터링을 통하여 임직원에게 시상 및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시상 및 제재조치의 기초가 된 평가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4조(교육프로그램의 실시)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 내부에 자율준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임직원들에게 어떤 행위가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에 저촉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전향의 교육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신규 입사자와 승진자는 신규 입사 및 승진 확정후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 규정 및 사업 관련 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구매, 영업 등 사업 관련 법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록①]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 ⑤ 교육 미이수자와 CP 위반자 발생시 해당 인원에게 대해 보수교육(자료배포, 시험 등) 또는 특별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⑥ 임직원 대상 교육은 집합 교육, On-line 교육 및 관련 자료의 게시 또는 배포 등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고, 법령상 중요한 변경 및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⑦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 및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CP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⑧ 교육 실시에 필요한 내용은 자율준수관리자의 결정에 따른다.

■ 제25조(포상 및 제재)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운영에 있어서 그 공로가 인정된 다음의 각 호의 자 및 부서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포상을 실시하되, CP위원회 보고 및 대표이사 승인에 따른다.
 - 1. 이 규정, 사업관련 법 등의 준수여부 점검 결과가 우수한 자
 - 2. 공정거래 교육 이수 우수자
 - 3. ISO37001, 37301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의 운용 우수자
 - 4.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 5. 기타 제4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율준수관리자가 인정한 자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 1. 시정권고
 - 2. 사유서 제출
 - 3. 경고
 - 4. 인사위원회 회부 요구 및 의견 제시
- ③ 제재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 운영 기준에 따른다.

■ 제23조(내부제보)

- ①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이 이 규정, 사업 관련 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수단을 통하여 즉시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준법지원팀에 제보하여야 한다.

[부록①]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1. V-GMP : Better KOLMAR - 윤리경영 위반행위
2. 이메일: compliance@kolmar.co.kr
3. 우편: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8 길 61(내곡동) 준법지원팀

- ② 자율준수관리자 및 주관부서는 임직원이 전항의 제보를 한 경우에 제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제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불순한 의도로 허위사실을 제보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 및 주관부서는 내부 제보 발생시 처리 경과와 결과를 이사회 혹은 CP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CP 관련 내부제보 채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채널 운영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유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제27조(내부신고의 조사)

- ① 주관부서는 CP와 관련한 내부제보가 제보 채널에 접수될 경우 해당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한 후 해당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다.
- ② 주관부서는 조사 중은 물론이고 조사 후에도 내부제보자의 신원 및 해당 내부제보 사실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주관부서가 해당 제보 건을 타인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제반 환경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 제28조(문서관리)

- ①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 ②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보관되어야 한다.
- ③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 ④ 보관에 필요한 내용 및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록①]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자율준수관리자가 문서 등의 작성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29조(운영성과 및 유효성 평가)

- ① CP의 운영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운영성과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CP운영 효과성 평가를 위해 인식도 조사, 인터뷰, 설문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평가결과를 연 1회 이상 최고경영자 또는 경영진에 보고한다.

■ 제30조(공시)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필요시 공시한다.

■ 제31조(세부 지침에 대한 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지침을 별도로 제·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개정

■ 제32조(개정의 필요성)

사업 관련 법 등의 개정 및 회사 상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 규정의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변화된 사정에 적합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 제33조(개정 절차 등)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관련 법규 등 개정에 따라 이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검토를 거친 후 대표이사의 최종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 ② 전면 개정의 경우에는 전항의 절차를 거친 후 즉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제1조(시행시기)

- 이 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3년 4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3년 6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록①]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이 규정은 2024년 6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5년 6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제2조(제재)

이 규정 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

■ 제3 조(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은 별도로 정하는 외에는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부록②] 내부거래 관리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콜마홀딩스(주)(이하 ‘콜마홀딩스’) 기업집단의 내부거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콜마홀딩스’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를 상대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이나 계열회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콜마홀딩스 기업집단 소속 회사간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회사 내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공정거래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인 :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
2. 특수관계인 :
 - 1)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 2) 동일인관련자
 - ①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계열회사 지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5~6촌 혈족 및 4촌 인척, 동일인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모 생모
 - ②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합하여 최다출연이거나, 그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혹은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③ 계열회사(‘사외이사 지배회사’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독립경영요건 불충족 시 포함)
 - ④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비영리법인/단체/계열회사)의 사용인(임원/상업사용인 등)
 -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부록②] 내부거래 관리규정

3. 기업집단 : 동일인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지분율 기준 또는 지배력 기준 등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로 계열회사 여부를 판단

1) 지분율 기준

-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 발생주식(우선주 제외)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함)

2) 지배력 기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①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②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③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와 당해 회사 간에 다음과 같은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

: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④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⑤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부록②] 내부거래 관리규정

■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유형은 아래와 같으며, 아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속경영사무국 ESG(CP)팀’(이하 ‘주관부서’)을 통하여 거래 유형을 판단 받을 수 있다.

- ①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 거래
- ②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 자산 거래
- ③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
- ④ 상품·용역 거래
- ⑤ 인력 제공
- ⑥ 거래단계를 추가하는 통행세 거래

■ 제4조(회사의 의무)

콜마홀딩스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본 규정 제3조(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유형의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른 거래 유형에 따라 반드시 ‘사전 심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결재:●, 합의:○]

구분	한국콜마			콜마홀딩스		
	팀장	준법지원팀장	인사팀장	ESG팀장	인사총무팀	지속가능경영사무국장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 자금거래						
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 자산거래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	●	○		●		●
상품*1)·용역 거래						
거래단계를 추가하는 거래						
인력의 제공	●	○	○	●	○	●

*1) 상품 거래 건당 500,000,000원 이하의 거래는 적용하지 않음.

※ 그룹웨어 내부거래 승인요청서 양식 활용(상신 부서는 필요시 업무 유관 부서를 참조에 포함시킬 수 있음)

[부록②] 내부거래 관리규정

제2장 내부거래의 원칙과 절차

■ 제5조(내부거래의 원칙)

1. 내부거래는 사업상 합리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지원할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2. 거래상대방 선정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 등의 경쟁적인 방법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3. 거래조건 설정 시 거래당사자간 입장에서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실질적으로 협상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도 거래조건을 지속적으로 검증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4. 자체적으로 거래조건 등을 설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감정평가 등의 방법으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거래와 관련된 증빙 서류는 임의로 수정 또는 파기 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철저히 보관한다.

■ 제6조(내부거래의 승인절차)

1. 내부거래 승인 신청은 V-GMP ‘내부거래 승인 요청서’ 양식을 통하여 진행한다.
2. ‘내부거래 승인 요청서’는 거래대가를 지급하는 주체(이하 ‘매입회사’)가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거래 승인 요청서’ 작성 시 거래와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매출회사’가 1개의 동일한 상품·서비스 등을 동시에 다수 ‘매입회사’에게 제공하는(예 : 정기 IT서비스) 등의 거래 유형인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다수의 ‘매입회사’ 중복된 요청서 작성으로 인해 결재 지연 등의 업무 비효율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출회사’가 다수의 ‘매입회사’를 대신하여 ‘내부거래 승인 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매입회사’가 그룹웨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작성 주체 및 작성 방법의 변경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3. 승인 요청은 계약서 체결 이전 최소 7일 전까지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계약서 체결 당일까지 요청할 수 있다.

[부록②] 내부거래 관리규정

- 단, 거래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승인을 위한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 요청 진행 전 ‘주관부서’와 사전 협의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4. 승인이 완료된 경우 해당 승인은 계약에 따른 거래기간 만큼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단, 거래 건 별로 계약 기간은 최대 1년을 넘길 수 없으며, ‘매입회사’는 거래 가격, 목적물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재승인 요청을 진행하여야 한다.
5. ‘주관부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규 요청 건 또는 기 승인된 거래 건에 대하여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매입회사’는 이에 따라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제7조(내부거래 승인 요청 시 필수사항)

1. ‘내부거래 승인 요청서’ 작성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한다.
 - ① 거래 상대방 및 거래 유형
 - ② 거래 목적 및 거래 상대방의 선정 사유
 - ③ 거래 기간 및 거래 규모
 - ④ 기타 거래와 관련된 주요 사항 일체
2. ‘내부거래 승인 요청서’ 결재 요청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반드시 첨부한다.
 - ① 계약서(법무팀 검토 완료본)
 - ② ‘내부거래 체크리스트’[별첨 1]
 - ③ 기타 거래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 및 자체 검토 자료

제3장 기타사항

■ 제8조(점검 및 보고)

‘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내부거래’ 승인 절차 운영에 관한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등 필요 시에는 시정조치, 권고의견 제시 등의 사후조치를 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제9조(징계)에 따른다. 점검 및 사후조치와 관련하여서는 ‘내부거래위원회’ 및 CP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부록②] 내부거래 관리규정

■ 제9조(징계)

‘주관부서’ 점검 및 보고 결과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 본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적절한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인사 위원회 회부는 ‘내부거래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하며,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 제10조(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승인은 ‘내부거래위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 한다.

부 칙(2021.5.3)

이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1)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1.13)

이 규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록②] 내부거래 관리규정

[별첨 1]. ‘내부거래 체크리스트

콜마홀딩스(Kolmar Holdings Regulation)	
내부거래 체크리스트	개정일 : 2024. 12. 17

구분	작성 부서(매입회사)	작성자	작성 일자

1. 계약 방식 확인

문항	입찰	수의
- 관계회사와의 계약 방식은 무엇입니까?		

▼ ▼
표[A] 작성 표[B] 작성

① 표[A] : ‘입찰’ 계약 검토 항목

번호	문항	예	아니오
1	입찰 조건을 특정 관계회사에게 유리하도록 설정하였는가?		
2	입찰 형식으로 보이기 위해 입찰과 관계없는 회사 또는 입찰 조건을 사전 협의한 회사들을 둘러리 세웠는가?		
3	입찰 검토 시 사업비용, 기술력, 전문인력 구성 등이 아닌 주사위 던지기, 제비뽑기 등 간편한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4	입찰 결과가 나왔음에도 특정 관계회사가 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의로 결과를 조정하거나 변경하였는가?		
5	관계회사로 입찰 대상 선정 후 입찰 조건과 다르게 관계회사에 불리 또는 유리하도록 조건을 임의로 조정하였는가?		
6	입찰 계약서에 대하여 법무팀 검토를 받았는가?		
7	입찰 계약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찰 요건 관련 문서, 회사별 입찰 제안서, 비교 검토/결과 선정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잘 구비하고 보관하고 있는가?		
8	향후 공정한 입찰 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 의무를 이행하고, 입찰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공정한 입찰 조건이 설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는가?		

‘입찰’ 계약 체크리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증빙을 첨부하시어 ‘내부거래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신 후 ‘ESG팀’으로 검토 요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②] 내부거래 관리규정

② 표[B] : '수익' 계약 검토 항목			
1	일반문항	예	아니오
1-1	해당 관계회사 선정 사유를 합리적으로 검토하였는가? (해당하는 사유를 요약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관련 내용은 [별첨 1]을 참고		
	(1) 효율성	예) 상품/서비스 생산 과정이 표준화되지 않아 경쟁방법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	
	(2) 보안성	예) 신상품 개발 및 출시와 관련하여 비 관계회사를 통한 운송 시 해당 상품의 기술 또는 디자인 등이 공개되기 전까지 극비에 붙여야 할 중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3) 긴급성	예) 물류회사들의 연대적이고 전면적인 운송거부 내지 파업 상황에서 긴급하게 물량수송이 필요한 상황임	
1-2	회사 선정 사유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을 구비하고 보관하고 있는가?		
2	가격 적정성 문항	예	아니오
2-1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 가격 및 조건을 확인하였는가? 또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정부 고시, 법령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을 근거로 산정 기준에 충분히 활용하였는가?		
	▶ 활용 근거 : (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기술자 평균임 공표자료		
2-2	거래조건을 정함에 있어 관계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했는가?		
2-3	비관계회사와 거래조건 비교 시 해당 거래 조건이 동일 또는 유사한가?(차이가 있는 경우 해당 차이를 없애거나 조정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진행하였는가?)		
2-4	가격 산정 및 조건 설정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을 구비하고 보관하고 있는가? (예 : 시장 분석 보고서, 외부기관 감정서, 협상 회의록 등)		
3	물량 적정성('상품/용역' 거래 한정) 문항	예	아니오
3-1	비관계회사와 진행 중이던 거래를 타당한 근거 없이 비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등 이를 관계회사의 물량으로 대체하였는가?		
3-2	관계회사와의 거래 물량은 통상적으로 비관계회사와 거래가 진행되었다면 이뤄질 수 없는 만큼의 상당한 수준인가?		
	▶ 해당 거래액 규모가 상대 관계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		

[부록②] 내부거래 관리규정

3-3	해당 거래물량만으로 상대 관계회사가 사업개시 또는 사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물량을 초과할 정도의 거래규모가 확보 되는 등 상대 관계회사의 사업위험이 제거되는 수준인가?		
4	거래단계 적정성(통행세) 문항	예	아니오
4-1	제3자인 비관계회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관계회사를 거래 중간 단계에 추가하여 거래구조를 형성하였는가?		
4-2	관계회사를 중간 단계에 추가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가?		
4-3	관계회사는 중간 단계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가?		
4-4	관계회사가 수행한 역할에 대해 합리적인 대가를 제공했는가? (해당 역할 대비 과도하게 또는 과소하지는 않은지)		
5	일반문항	예	아니오
5-1	수의 계약서에 대하여 법무팀 검토를 받았는가?		
5-2	계약 이후에도 해당 거래조건의 타당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관계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객관적 근거 하에 공정한 거래조건이 설정되도록 하겠는가?		

‘수의’ 계약 체크리스트가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증빙을 첨부하시어 ‘내부거래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신 후 ‘ESG팀’으로 검토 요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③] 준법통제기준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한국콜마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제정·시행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법통제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준법통제’란 회사가 사업 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임직원의 법규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각종 법적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일체의 정책수립 및 통제 활동 과정을 말한다.
2. ‘법적 위험’이란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민사·형사·행정적 책임이 발생하거나 계약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3. ‘준법지원인’이란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준법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적용)

- ① 준법통제기준은 회사의 모든 업무와 임직원들의 모든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 ② 준법통제기준과 관련 있는 회사의 각종 규정은 준법통제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률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준법통제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제4조(제정 및 개정)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거쳐 준법통제기준을 제정 및 개정한다.

제2장 준법통제환경

■ 제5조(조직 구성과 업무 분장의 기본 원칙)

준법 통제를 위한 조직 구성과 업무 분장은 준법 통제 업무의 효율성과 준법지원인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관련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관계가 명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부록③] 준법통제기준

■ 제6조(각 기관의 역할)

- ① 이사회는 준법통제기준 및 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또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정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준법통제체제를 정비하고 실효적으로 운용하는 지를 감독한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이사회는 준법통제업무를 관장할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는 준법통제기준과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규모나 영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준법통제체제를 구축·정비·운용하고 그 작동상황을 감독한다.
- ③ 준법지원인은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등 준법통제업무를 실무적으로 통괄한다.

■ 제7조(준법지원인의 임면)

- ① 준법지원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 ② 대표이사는 준법지원인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준법지원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생기게 한 경우
- ③ 준법지원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하며, 임기 중 해임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제2항 각호의 해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준법지원인은 해임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준법지원인이 해임되거나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신속하게 새로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8조(준법지원인의 자격, 임기 및 지위)

- ① 준법지원인은 상법 제542조의13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에서 선임 되어야 한다.
- ② 감사 또는 감사위원은 준법지원인이 될 수 없다.
- ③ 준법지원인은 상근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록③] 준법통제기준

■ 제9조(준법지원인의 권한 및 의무)

- ①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호와 같은 직무상 권한을 가진다.
 1. 준법에 관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의 시행
 2.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의 점검 및 보고
 3. 준법지원인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정보·자료의 수집과 제출 요구 및 진술의 요구
 4. 임직원에 대한 준법 요구 및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중지, 개선 또는 시정의 요구
 5.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요청
 6. 준법통제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이사회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7. 준법 업무 보조 조직의 통솔 및 관련 부서 직원의 인사 제정
 8. 기타 이사회가 준법지원인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준법지원인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언 및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③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재임시 뿐만 아니라 퇴임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10조(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수행)

- ① 준법지원인은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직접, 적시에 보고할 수 있다.
- ② 준법지원인은 제1항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준법지원인은 준법지원 및 통제 업무를 독립적이고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회사 내 직급을 가진다.
- ④ 회사는 현재 또는 과거의 준법지원인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11조(준법지원인의 겸직 제한)

준법지원인은 준법 관련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부록③] 준법통제기준

제3장 준법통제활동

■ 제12조(법적 위험의 평가)

- ① 이사회는 회사 전체적인 위험관리체제하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인 법적 위험 평가 및 관리 체제를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운용한다.
- ② 준법지원인은 법적 위험의 크기·발생 빈도 등을 검토하여 위법의 발생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주요한 법적 위험 행위를 유형화하여야 한다. 준법지원인이 위의 유형화 작업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각 관련부서 및 임직원은 이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 제13조(법적 위험의 관리)

- ① 임직원은 업무상 법적 위험과 관련된 국내·외 법규 및 준법통제기준, 회사의 각종 내부 규정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위법행위나 준법통제기준 등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준법통제기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반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여서는 안 된다.
- ③ 각 관련부서와 준법지원인은 법적 위험이 타 부서로 이전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준법지원인은 법적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임직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 ①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이 취급 업무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법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시행한다.
- ② 준법지원인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준법 교육을 매년 일정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 준법 교육 :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준법 교육

[부록③] 준법통제기준

2. 채용시 준법 교육 : 신규채용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준법 교육
3. 특별 준법 교육 : 준법지원인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거나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준법 교육
- ③ 준법지원인은 제2항의 준법 교육을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④ 준법지원인은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및 실효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에 관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 ⑤ 준법지원인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의 운영과 별도로 업무상 법적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임직원들을 위한 상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일상적인 준법지원)

- ①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법적 자문업무를 수행하며, 임직원이 계약체결 등 법적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준법지원인과 사전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준법지원인은 위법행위나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임직원이 이를 신고 또는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업무상 제기되는 법적 위험 또는 준법 관련 쟁점에 관하여 준법지원인과 원활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6조(임직원의 자율적인 준법 점검)

- ① 각 부서는 자율적으로 준법 교육을 포함한 준법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자율 점검 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 ② 각 부서는 효과적인 자율 준법 점검을 위하여 점검사항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③ 준법지원인은 제1항에 따른 각 부서의 준법점검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자율 점검 실태를 평가한다.

[부록③] 준법통제기준

■ 제17조(준법지원인의 준법 점검)

- ① 준법지원인은 모든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준법점검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한다.
- ② 준법지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준법 점검은 1년에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제기된 특정 법적 쟁점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 점검이 있다.
- ③ 준법지원인은 효율적인 준법 점검을 위하여 부서별로 신고나 보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형화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 사항의 신고나 보고를 의무화할 수 있다.
- ④ 준법지원인은 준법 점검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⑤ 준법지원인은 준법 여부 점검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게 통보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 제18조(내부 제보)

-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집행행위 등에 관하여, 준법지원인 등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는 내부제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내부 제보를 받거나 처리하는 사람은 내부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제보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내부제보자가 본인이 관련된 위법이나 부정을 제보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고, 모든 내부제보자는 내부 제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 제19조(위반 시의 처리)

- ①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 등의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 이를 해당 부서책임자에게 통보하거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중지·개선·시정·제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등과 상의하여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표이사 등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준법지원인은 위의 보고 또는 건의 전에 자신의 판단에 의해 해당 임직원에게 관련 행위의 중지·개선·시정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부록③] 준법통제기준

- ③ 준법지원인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 행위의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건의할 수 있다. 재발방지방안이 결정되면 준법지원인은 이를 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의 개선 시에 반영한다.

■ 제20조(정보 및 자료의 전달과 관리)

- ① 준법지원인은 자신의 준법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해당 부서 임직원에게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준법지원인의 요청을 받은 임직원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② 준법지원인은 준법 통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통합 정보관리장치를 마련한다.
- ③ 준법통제체제에서 형성된 정보나 자료는 3년 이상 보관한다.

.제4장 유효성 평가

■ 제21조(유효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 ① 이사회는 준법통제기준 및 관련 체제가 유효하게 설계되고 운용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② 준법지원인은 자체적으로 준법 지원 및 점검 체제의 유효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③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의 자체 평가와는 별도로 매년 준법통제체제의 유효성 평가를 회사 전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④ 유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준법통제기준의 내용·법적 위험의 평가 및 관리 체제·준법 점검 및 보고 체제·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수행 체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체제 등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제 22 조(유효성 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

- ① 이사회는 유효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불비나 결함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이를 위하여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 ② 대표이사는 유효성 평가에 따른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부록③] 준법통제기준

제5장 기타

■ 제23조(임직원의 포상)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회사의 손해 발생 예방 및 감소 등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이나 승진을 건의할 수 있다.

■ 제24조(세부사항)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2019. 10. 22.)

이 기준은 2019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록④] 부패방지정책

■ 제1조 목적

- ① 한국콜마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부패방지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 ② 회사의 임직원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국내의 모든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 「뇌물 방지법(UK Bribery Act 2010)」, 「OECD 부패방지협약」 등 해외의 모든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조 정의

- ① “부패리스크”란 부패행위 및 부패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구체적 요소를 말한다.
- ②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의사결정 또는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조직을 말한다.
- ③ “비즈니스 관계자”란 회사와 사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수립할 계획이 있는 사람 또는 조직을 말한다.
- ④ “부정한 사업상 이익”이란 회사가 법령이나 사회 상규 등에 반하여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모든 이익을 말한다.
- ⑤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에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제3조 적용 범위

- ① 본 정책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고용계약의 형태와 수행 직무를 불문한다. 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또한 비즈니스 관계자와의 거래과정에서도 정책을 준수하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② 본 정책은 모든 사업 및 임직원의 업무수행에 적용된다.

[부록④] 부패방지정책

■ 제4조 관리 및 점검

- ① 회사는 내부통제, 준법 프로그램이 회사의 상황에 맞도록 조정되고 지속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 ② 회사는 부패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부패 관련 이슈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제5조 금품 등의 제공

- ① 임직원은 부정한 사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 · 제안 · 요구해서는 안 된다. 임직원은 금품 등의 제공과 관련하여 회사 내 정해진 승인 및 보고 체계를 따라야 하며, 특정 금품 등의 제공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준법지원팀에 문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사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정중히 거절하고 그러한 행위가 본 정책 및 부패방지법령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이를 용인하지 않고 있음을 설명한다. 거절이 확정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메시지나 오해나 재고의 여지가 없도록 하며, 즉시 준법지원팀에 그러한 제공 또는 요청이 있음을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 기부 및 협찬

- ① 임직원은 회사의 이름으로 혹은 회사를 대신하여 어떠한 형식으로든 정부 또는 공무원에게 정치적 기부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임직원은 부정한 사업상 이익이나 정치적 기부 은폐를 목적으로 기부나 협찬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 ③ 기부 및 협찬 진행 절차에 관해서는 「기부 및 협찬 업무 가이드라인」 제4조를 준용한다.

■ 제7조 비즈니스 관계자

- ① 회사는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의심되는 사업체와의 거래를 피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비즈니스 관계자가 회사와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은 금품 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상 명시 등을 통해 부패방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비즈니스관계자의 부패리스크를 발견하면 즉시 준법지원팀에 통보해야 하고 준법지원팀은 부패리스크를 검토하여 적법한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부록④] 부패방지정책

■ 제8조 장부와 기록

회사는 모든 거래를 적절하고 공정하게 기록한 회계장부와 기록들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9조 교육

- ① 회사는 임직원의 부패방지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부패방지에 대한 실행 의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부패방지교육을 진행한다. 부패방지교육을 통해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발견된 부패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이 부패방지법령, 사규 및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며, 임직원은 해당 교육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부패방지법령 및 정책의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법령 및 정책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준법지원팀에 문의하여야 한다.

■ 제10조 신고 및 보복 금지

- ① 회사는 부패방지법령 위반이나 부패리스크를 인지하는 임직원으로부터 신고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 ② 임직원은 본 정책 또는 부패방지법령 위반이나 부패리스크를 인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준법지원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신고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내부신고제도(V-GMP, 우편, 홈페이지 제보 코너 등)를 이용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1조 제재조치

임직원이 본 정책 · 사내 규정 또는 부패방지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리스크를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해당 임직원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부록⑤]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

사람이 중심인 한국콜마는 인류 건강과 아름다움을 책임지고 궁극적으로 가치 있는 삶에 공헌하는 기업으로서, 인간경영, 기술경영, 가치 경영 및 책임경영이라는 기업이념을 실현하고 규범준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한다.

하나, 회사와 임직원은 국내외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규범준수 의무사항과 사내 규정 등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둘,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금품, 향응 그리고 뇌물을 주거나 받지 않으며 어떠한 부패행위 및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셋, 회사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한다.

넷, 규범준수 책임자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운영에 대한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지배기구에 대한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보고 의무를 갖는다.

다섯, 임직원은 규범준수 이슈를 관리하고 규범준수 책임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여섯, 회사는 임직원의 부패 행위나 규범준수 의무사항의 미준수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일곱,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포함한 규범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알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록⑥] 특수관계자 거래 자율점검표

■ 특수관계자(관계사 등)와의 거래

※ 자율점검표 기준

- : 법 준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 X: 즉시 시정조치해야 합니다.

* △와 X가 확인될 경우, 준법지원팀 및 유관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 비고란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작성합니다.

구분	No.	항목	답변	비고
일반 사항	1	관계사와의 거래를 비관계사들과의 거래와 별도로 구별하여 법 위반 사항을 관리한다.		
	2	계약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는 정확하게 문서(회의록, 기안문 등)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거래 개시 단계	3	거래상대방을 결정할 때,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수의계약으로 거래상대방을 결정할 경우, 보안성, 긴급성, 효율성 등 수의계약 체결의 합당한 사유를 확인하고, 그 근거 자료를 구비한다.		
	5	수의계약 진행 전 반드시 거래별 정상가격을 확인하고 그 근거 자료를 구비한다.		
	6	경쟁입찰로 거래상대방을 결정하는 경우, 입찰 조건에 관계사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이 없는지 검토한다.		
	7	거래단계에서 관계사를 추가하거나 거쳐야 하는 경우, 경영상의 필요 외에 그와 같은 거래구조가 필요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여 문서로 보관한다.		
거래 협상 및 거래 조건 결정 단계	8	거래를 추진할 때, 거래상대방을 지원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한 표현(그룹사 실적, 시너지 효과 등)이 있는지 점검한다.		
	9	추진 중인 거래의 대가가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 있더라도 해당 거래 대가가 적절한 수준인지 별도로 검토한다.		
	10	협상단계에서 해당거래가 일방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은 지 검토한다.		
	11	당사는 거래대가의 결정과 관련하여 비관계사와의 기존 거래 사례,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되는 유사한 계약의 거래조건,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공표되는 거래조건을 충분히 확인한다.		
	12	필요한 경우, 거래조건에 대하여 공신력있는 외부기관(감정평가법인 등)을 통해 검토 받는다.		
	13	관계사와 거래를 체결할 때, 비관계사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며, 계약 체결 단계를 축소하거나 우대하지 않는다.		
	14	관계사와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에도 거래조건에 계약 불이행시의 페널티 조항을 삽입한다.		

[부록⑦] 특수관계자 거래 자율점검표

구분	No.	항목	답변	비고
거래 이행 단계	15	관계사도 예외 없이 이행기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독촉 및 지연 책임을 지도록 한다.		
	16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대금 결제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17	관계사와 거래를 하는 도중에 상응하는 대가나 합리적 근거 없이 대금을 증·감액하지 않으며, 대금 집행과 관련된 당사 내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거래 갱신 단계	18	갱신, 재계약 등의 경우에, 거래 조건의 변동 요인(가격 인상 요인 등)이 있는지 점검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19	거래상대방의 전년도 계약 이행 정도(채무불이행 등)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를 갱신 과정에 반영하도록 한다.		
	20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최초 계약과 마찬가지로 거래조건이 객관적인 조건에 부합하는지 재확인하여 갱신 여부를 검토한다.		

[부록⑧] 하도급거래 자율점검표

하도급거래

※ 자율점검표 기준

- : 법 준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 X: 즉시 시정조치해야 합니다.

* △와 X가 확인될 경우, 준법지원팀 및 유관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 비고란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작성합니다.

구분	No.	항목	답변	비고
일반 사항	1	협력사와의 거래 중 하도급법 적용 대상인 거래를 별도로 관리한다.		
	2	계약 및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는 정확하게 문서 (회의록, 기안문 등)로 기록하여 보관한다.		
거래 개시 및 협상 단계	3	협력사와의 계약에 있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4	협력사에게 계약조건으로 기술자료, 영업비밀 등의 제공 또는 제3자에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5	협력사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중단하거나 타 거래처로 변경할 가능성으로 오인될 수 있는 자료, 문구 제시 또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6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때, 유사 거래관계에서 지급된 대가, 공표가격 등을 조사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가격보다 낮은 대금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7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 목적물의 검사방법·절차·기준, 반품 사유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협의하고, 그 협상과정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겨두고 있다.		
	8	협력사가 위탁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서 등 하도급 서면을 교부한다.		
	9	협력사에 교부되는 하도급 서면에 법정 기재사항, 거래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누락될 경우,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0	협력사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는 경우, 기술자료 제공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거래 이행 단계	11	협력사에게 추가로 위탁하는 작업이나 부수적인 작업의 경우에도 협력사에게 추가계약서, 작업지시서 등 서면을 먼저 교부하고 있다.		
	12	협력사가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10일 내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록⑨] 하도급거래 자율점검표

구분	No.	항목	답변	비고
거래 이행 단계	13	위탁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협력사와 합의한 기간 (최대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14	협력사로부터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명목의 금원을 수취하지 않는다.		
	15	협력사가 특정한 사업자와 거래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16	협력사의 경영에 개입하지 않고, 협력사의 경영상 영업 비밀을 요구하지 않는다.		
거래 갱신 단계	17	협력사와의 계약이 갱신되거나 연장되는 경우에도, 하도급법상 교부가 필요한 서면을 발급한다.		
	18	협력사의 귀책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거래종료가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보관한다.		
	19	거래가 종료된 후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유용하지 않고 있다.		
하도 급 대 금 연 동	20	협력사와 ‘하도급대금연동제’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고, 협의 과정을 모두 문서로 기록한다.		
	21	하도급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취지 및 사유 등 협의 개요를 계약서에 명시한다.		
	22	‘하도급대금연동제’에 대해 협의할 때, 협력사의 의견을 존중한다.		

[부록⑩] 영업비밀 보호 자율점검표

■ 영업비밀 보호

※ 자율점검표 기준

- : 법 준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 X: 즉시 시정조치해야 합니다.

* △와 X가 확인될 경우, 준법지원팀 및 유관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 비고란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작성합니다.

구분	No.	항목	답변	비고
정보 의 출처 확인	1	시장조사를 수행할 때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등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2	외부 컨설턴트나 서비스 제공업체를 사용할 때, 얻은 정보가 타사의 영업비밀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타사 의 정보 관리	3	타사 관련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출처를 검증하고 있다.		
	4	취득한 정보가 타사의 영업비밀임이 확인되면 해당 정보를 그 즉시 파기하고 있다.		
	5	타사의 기술자료, 영업비밀들을 합당한 사유 없이는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6	계약 등을 통해 취득한 타사의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7	계약 등을 통해 취득한 타사의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직급별, 업무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8	당사는 계약을 통해 취득한 타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타사의 사전 동의를 받고 있다.		
	9	전사 문서관리지침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10	전사 문서관리지침에 따라 사내에서 생성된 문서에 대해 보안등급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자사 의 정보 관리	11	기밀, 대외비 문서에 대해 비밀로 관리되는 문서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고 있다.		
	12	비밀문서는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대상자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3	비밀문서는 일반 문서와 다르게 별도의 저장장치 혹은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부록⑪] 영업비밀 보호 자율점검표

구분	No.	항목	답변	비고
자사의 정보 관리	14	비밀문서 관리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담당자는 해당 문서의 반출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15	원칙적으로 업무에서 발생된 모든 문서, 자료 등은 회사 밖으로 반출하지 않고 있다.		
	16	부득이하게 외부로 문서, 자료 등을 반출할 경우, 지정된 승인자에게 허가를 받은 뒤 반출하고 있다.		
	17	추후 분쟁 대응을 위하여 문서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철저히 보관한다.		
	18	임직원 대상 영업비밀 보호교육이 있을 시 참석하여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19	신규 입사자, R&R 변경 등 조직 내 업무이관이 있을 경우, 비밀 관리에 대한 교육을 부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부록⑫] 자율준수 공통 자율점검표

■ 자율준수 공통

※ 자율점검표 기준

- : 법 준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 X: 즉시 시정조치해야 합니다.

* △와 X가 확인될 경우, 준법지원팀 및 유관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 비고란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작성합니다.

No.	항목	답변	비고
1	회사의 규정과 방침(사규, SOP, 지침 등)을 인지하고 준수하고 있다.		
2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화장품법 등 업무와 관련된 법령을 인지하고 준수하고 있다.		
3	회사의 유·무형자산에 대하여 무단 사용, 반출·입 하지 않는다.		
4	상사 및 동료를 포함한 모든 업무 관계자에게 상호존중의 태도로 대한다.		
5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고객사 등을 응대하는 경우, 사내 지침 및 법령에서 정해진 한도 및 범위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7	협력사로부터 금품, 선물, 향응 등을 일체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8	협력사의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을 합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지 않는다.		
9	규범 미준수 사항을 발견하거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회사에 제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